

# EU Brief

| EU 동향 |

- 유로존 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  
Eurozone's recovery and the need for a structural reform
-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유럽 주택시장  
Bi-polarization of the European housing market
- 이란 핵협상과 EU의 역할  
The EU's role in Iran nuclear negotiation
- 리스본 조약으로 FDI 정책이 하나로 통합되는 EU  
Integration of EU's FDI policies through Treaty of Lisbon
- 글로벌 가치사슬과 동유럽 제조업  
Global Value Chain and Eastern Europe's manufacturing sector

 삼성경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15번지  
삼성생명 서초타워 28층

Phone: 3780-8306

Fax: 3780-8009

[www.yonseri.org](http://www.yonseri.org)



EUROPEAN COMMISSION  
External Relations



Yonsei-SERI EU Centre

	<b>EU Focus</b> 유로존 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 ..... 002 Eurozone's recovery and the need for a structural reform
	<b>EU Economy</b>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유럽 주택시장 ..... 004 Bi-polarization of the European housing market
	<b>EU Politics</b> 이란 핵협상과 EU의 역할 ..... 008 The EU's role in Iran nuclear negotiation
	<b>Trade &amp; Investment</b> 리스본 조약으로 FDI 정책이 하나로 통합되는 EU ..... 012 Integration of EU's FDI policies through Treaty of Lisbon
	<b>Industry Trends</b> 글로벌 가치사슬과 동유럽 제조업 ..... 016 Global Value Chain and Eastern Europe's manufacturing sector
	<b>EU Law</b> 2013년 하반기 EU의 경쟁법 집행 동향 ..... 020 Execution of the EU competition law in the second half of 2013
	<b>Social Issues</b> EU 역내 이주민 문제의 실상 ..... 025 Immigration issue in the EU
	<b>Report Review</b> 금융시장 분절화 해소를 통한 유로존 경제 회복 ..... 030 Financial market fragmentation and Eurozone's recovery
	<b>EU Centre News</b> 제21회 EU Core-Circle Society 세미나 개최 ..... 032 The 21 <sup>st</sup> EU Core-Circle Society Seminar



# 유로존 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

## Eurozone's recovery and the need for a structural reform

The Eurozone economy is projected to grow in 2014. The problems that plagued the continent - excessive government debt, banking crises and insufficient bailout funds are slowly being solved, laying a groundwork for recovery. Criticisms on the leaders of the Eurozone for their failure to intervene timely and effectively have also lessened. By and large, financial markets have been stabilised and confidence has returned, leading to economic recovery.

However, as the European Central Bank president Mario Draghi has pointed out, the Eurozone's recovery is still weak and uneven. If the results of bank stress tests ahead of the Banking Union indicate higher capital requirements than expected, consumer and investor confidence will likely fall again, possibly leading to the renewal of crisis.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support the recovery with robust policies which will bring structural changes.

First and foremost, the Eurozone must find ways to fix the chronic problem of current account deficits in southern Europe. Southern Europe has, up to now, financed their current account deficits via borrowing from Northern Europe. However, in the aftermath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current account imbalances became one of the causes of the fiscal crisis. The central priority of the Eurozone structural reform should be to resolve the unbalanced dual structure that results from the differences in current account balances between Northern and Southern Europe.

The results of the Eurozone's efforts to resolve the fiscal crisis are worth commending. The European Stability Mechanism(ESM) has contributed to the build-up of confidence outside the region and the Fiscal Compact has led the members to undertake structural reforms and improve their competitiveness. Meanwhile, propelling the Banking Union agenda

via the agreement on the creation of Single Supervisory Mechanism(SSM) and Single Resolution Mechanism(SRM) has laid a groundwork for breaking the bank-sovereign negative feedback loop as well as increasing the private sector borrowing through the easing of financial fragmentation. Moreover, institutional integration have eliminated obstacles between member countries, boosting their growth prospects.

So what are the remaining tasks at hand? At the Eurozone-level, lowering interest rate or increasing government spending or devaluing its currency is not a feasible option. The only option that individual members can explore to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is to undergo structural reforms. The discrepancies of current account balance between core and peripheries result from the differences in their competitiveness.

However, enhancing individual members' competitiveness takes a long time but also hardly reduces the fundamental flaw. Hence the Eurozone requires an integration process that satisfies the conditionalities for a currency union set by Robert Mundell - free movement of goods, services, and labour, convergence of economic cycles as well as Fiscal Union that enables fiscal transfers between members.

The need for harmonising member countries' labour regulations and social security programmes is rising. Retrospectively, European integration has deepened in the face of crises and we hope that a close cooperation among the Eurozone members ushers in a new starting era for the EU in 2014. ★

Yongdae Shin, a Chair Professor at Kunkuk University

유럽중앙은행(ECB)에 따르면 유로존 경제는 2014년부터 플러스 성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유로존 경제를 억누른 정부부채 누적과 지불능력 감소, 유동성 문제, 국채를 과다 보유한 은행부문 위기, 충분하지 못한 구제금융 등의 문제가 상당부분 완화되면서 경제 회복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유로존 회원국 정책당국자의 리더십 약화로 범유럽 기구의 대응이 늦어 시장의 신뢰가 상실되었다는 지적도 크게 줄어들었다.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소비자와 투자자의 신뢰가 살아나면서 유로존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마리오 درا기 ECB 총재가 지적한 것처럼 유로존의 경기회복은 여전히 취약하고 불균등하다. 유로존은 은행동맹의 일환으로 은행자산을 실사하고 있는데, 실사 결과 은행의 자본이 예상치 이상으로 부족하여 투자자의 신뢰가 다시 악화되고 역내 수요가 크게 위축되었다. 이 경우 위기가 재연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유로존이 위기를 단절하고 견고한 성장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도 높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유로존은 우선 재정위기를 초래한 남유럽 국가의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해소방안을 찾아야 한다. 소비주도형 경제구조로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해온 남유럽 국가들은 수출 제조업에 특화된 북유럽의 흑자국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국제수지 균형을 이뤄왔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남유럽 국가들의 국제금리가 상승한 것이 재정위기의 단초가 되었다. 특히 유로존 역내 불균형의 상당부분이 민간부문에서 비롯되었고, 각국 정부의 제재수단이 부족하였던 것도 위기를 심화시킨 요인이다. 따라서 유로존 구조개혁은 남유럽과 북유럽의 경상수지 격차에서 오는 불균등한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유로존이 추진한 정책적 노력의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우선 2012년 9월 출범한 유럽안정화기구(ESM)는 유로존의 대외 신뢰기반을

구축하는 데 일조하였고, 재정준칙을 강화한 「신재정협약(Fiscal Compact)」은 경제구조 개혁을 유도하여 유로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한편, 단일은행감독체제(SSM) 창설(2013년 10월 관련법 발효)에 이어 단일은행리치체제(SRM) 합의(2013년 12월)를 통한 은행동맹의 추진은 유로존 내 은행위기가 재정위기로 전이되어 '재정위기-금융위기-실물위기'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유로존 금융시장의 균열을 완화해 민간대출 확대에도 기여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제도적 통합을 통해서 역내 위기를 가져오는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견고한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들은 무엇일까? 유로존 차원에서는 소수의 경기침체 국가를 위한 금리인하나 재정지원은 물론 유로화의 평가절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유로존 개별 국가가 자국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은 구조개혁이 유일하다. 남유럽과 북유럽의 경상수지 격차를 가져오는 이중구조 현상은 회원국 간 경쟁력 격차에서 비롯된다.

유로존 위기에서 목도한 바대로 회원국 차원의 경쟁력 제고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격차 해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유로존은 로버트 먼델이 지적한 통화통합의 조건들 가운데,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이동 외에 노동의 자유이동, 경기동조화, 회원국 간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재정동맹(Fiscal Union)을 위한 혁신적 통합과정이 필요하다.

유로존은 언어, 문화, 종교는 논외로 하더라도 국가별로 상이한 노동 및 사회보장제도의 조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통합기반을 강화할 유인이 증대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유럽 통합의 심화과정은 경기침체나 대외경쟁력 상실 등의 위기 극복 과정에서 탄력을 받아왔다. 2014년에는 유로존 국가들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유로존 경제 회복 이후를 향한 유럽 통합의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

신용대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석좌교수





#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유럽 주택시장

## Bi-polarization of the European housing market

House prices of the Eurozone are continuing the downward trend since Autumn of 2011, and the prices of the second quarter of 2013 are about 5% below the level reached in 2008. The house prices currently reveal some sharp contrasts across Europe. The bi-polarization have thrown into sharp relief by the house price differences among eight Eurozone countries and the UK. The bi-polarization of Eurozone housing market is the result of different speed of economic recovery in member states and it is also robustly influenced by structural factors such as financial fragmentation. Seven major cities in Germany are constantly gaining ground due to strong capital inflows and this is raising concerns about a housing bubble. On the other hand, the housing markets of Southern Europe are struggling to recover. Demand for housing has shrunk in these countries as they continue to suffer from high unemployment rates and excessive household debt. Also, deleveraging and tightening of household loan approval by banks in Southern Europe is exacerbating the pain in the housing market.

### 유럽 주택시장 상황으로 본 실물경제 회복 진단

2014년 초부터 남유럽 국가들의 국제금리가 하락하고, EU-IMF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종료된 아일랜드와 스페인의 국제 경매시장에 예상을 크게 웃도는 자본이 몰리는 등 유로존 재정위기가 완전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12%를 웃도는 높은 실업률과 과다한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부진 등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대두되고 있어 유로존 경제의 위기 탈출을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주택시장과 내수경기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주택가격은 실물경제의 회복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유용한 지표다. EU 경제에서 주택시장이 갖는 중요성은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내수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주택시장은 건설업은 물론 금융업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과도 직결되어 있어,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가계소비도 증가한다.

주택가격과 주택거래량이 주택시장의 회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므로, 유럽 주요국의 주택가격 추이와 유럽 주택시장의 양극화 원인을 살펴보고, 향후 주택시장 전망과 한국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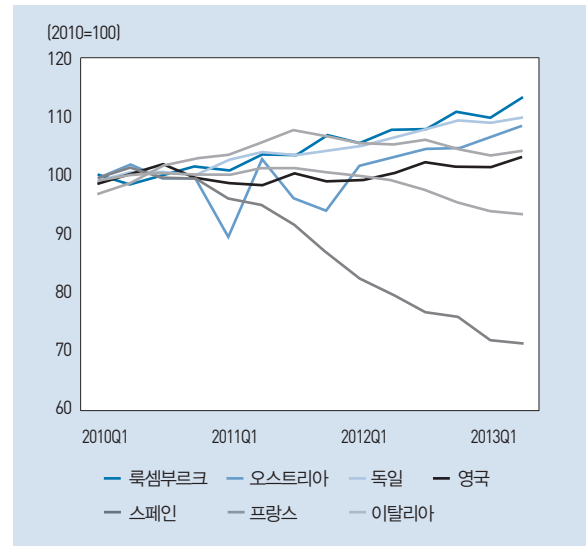
### 유럽 주택시장의 양극화 현상

ECB의 분석<sup>1</sup>에 따르면, 유럽의 주택가격은 2011년 가을 이래 지속 하락하고 있다. 2013년 2/4분기 현재

유로존의 주택가격 하락세는 1/4분기의 하락폭(2.8%)보다 다소 완화되었으나 2012년 2/4분기에 비해서는 2.4%나 더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3년 2/4분기의 유로존 주택가격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8년 중반에 비해 약 5% 밑돌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유럽의 주택가격 추이는 국가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유로존 8개국과 영국의 주택가격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유럽 주택시장에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13년 2/4분기에 가격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국가는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다. 영국, 독일, 벨기에, 핀란드도

### ★ 유럽 주요국의 주택가격 지수 추이



자료: ECB, Eurostat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는 주택가격 급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포르투갈, 프랑스의 주택가격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아일랜드는 하락세를 보이다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 독일과 영국이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

유럽 국가들 중에서 독일과 영국의 주택가격 상승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나라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은 아니지만, 유럽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1994~2008년 독일의 주택가격은 다른 OECD 국가들과는 달리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하지만 2008년 이후부터 주택수요 증가에 힘입어 가격이 꾸준히 상승했다. 도이체방크의 최근 자료<sup>2</sup>에 따르면, 2013년에 독일 전체의 아파트는 7% 이상, 주택은 6% 이상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주택가격 상승세는 양호한 경제성장<sup>3</sup>과 노동시장 호조<sup>4</sup>에 힘입은 독일경제에 대한 낙관론에 기반한다. 뿐만 아니라 사상 최저치를 기록 중인 저금리 환경도 주택가격 상승에 한몫했다.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은 도시지역에 집중되었다. 특히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다른 투자처에 비해 안전하고 투자 수익성이 높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인구 구성과 경제적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독일 도시지역의 주택가격은 정상보다 5~10%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 프랑크푸르트 등 7대 도시의 아파트는 정상 가격보다 20% 이상 높은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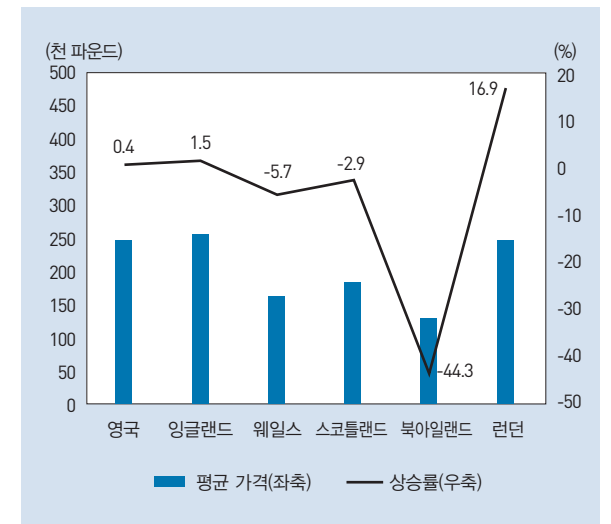
한편, 2013년 영국의 주택가격은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8.4%)을 기록하였다. 영국의 주택가격은 2009년 6월부터 점차 회복되기 시작해 2013년 10월 현재 과거 최고치(2008년 1월)를 넘어섰다.

<sup>2</sup> Deutsche Bank Research (2014), Talking Point: Outlook on the German housing market.  
<sup>3</sup> 독일경제는 2013년 0.4% 성장했으며, 2014년에는 성장세가 가속화되어 경제성장률이 1%대 후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  
<sup>4</sup> 독일의 실업률은 2013년 11월 현재 5.2%로 오스트리아(4.8%) 다음으로 가장 낮음.

영국의 주택가격 상승에는 2013년 4월부터 캐머런 정부가 시행해온 ‘헬프투바이(Help to buy)’로 불리는 주택구입지원정책이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헬프투바이’ 정책은 생애 처음으로 60만 파운드 미만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영국정부가 주택가격의 20%까지 지급보증을 해주어 주택가격의 5%의 자금만 있으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3년 9월까지 6개월간 신청건수가 5,375건, 지급 보증액이 2억 파운드를 넘어설 정도로 호응이 높다. 또한 2012년 3월부터는 주택가격의 5~10%의 예치금만 있으면 정부 보증의 모기지론을 통해 50만 파운드 미만의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NewBuy scheme)도 시행되고 있다. 2013년 9월 말 현재 총 4,450건의 신청이 이루어져 정부의 모기지론 보증 규모가 4,590만 파운드에 이른다.

영국의 주택가격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2013년에 런던의 주택가격은 15% 상승한 반면, 북부지역은 고작 1.9% 상승하는 데 그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3년 10월 현재 런던의 주택가격은 위기 이전의 최고치보다 16.9%나 높게 형성되어 있으나, 북아일랜드(-44.3%), 웨일스(-5.7%), 스코틀랜드(-2.9%) 지역의 주택가격은 2008년 초에 비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다.

### ★ 영국의 지역별 주택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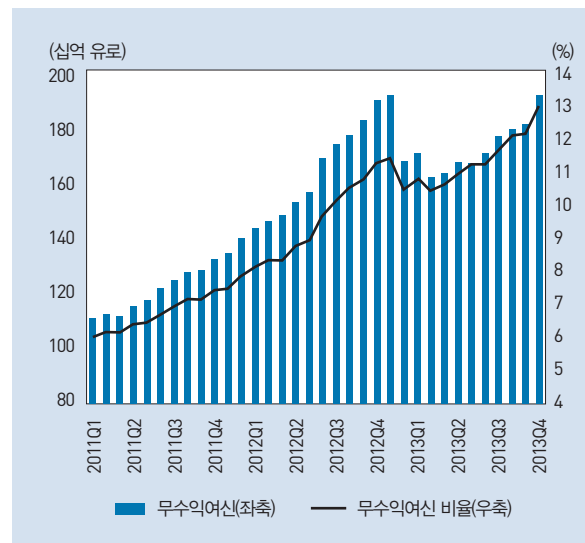
주: 1) 평균 가격은 2013년 10월 기준  
 2) 상승률은 2008년 1월 대비 2013년 10월 가격을 비교  
 자료: 영국 통계청

## 유럽 주택시장 양극화의 원인

유로존 주택시장의 양극화는 회원국들의 경기흐름과 수급 상황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나, 금융시장의 분절화(fragmentation)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금융시장 분절화란 유로존 역내 자금흐름의 쏠림현상이 심해 북유럽 국가들은 저리의 유동자금이 넘쳐나는 반면, 남유럽 국가들은 신용경색을 겪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독일은 저금리 자금이 대거 유입되어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 프랑크푸르트 등 7대 도시의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수익이 예상되는 아파트 시장에 유동자금이 유입되어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일각에서는 저금리로 인한 주택버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남유럽 국가들의 주택시장은 수급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높은 실업률과 과다한 가계부채로 인해 주택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북유럽 은행들의 남유럽 신용대출 축소, 남유럽 은행들의 부실자산 증가와 이로 인한 가계대출 기피 등이 주택경기를 위축시키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버블 붕괴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는 스페인은 과다한 가계부채와 경기침체,

### ★ 스페인의 무수익여신 추이



자료: 스페인 중앙은행

고용악화 등으로 주택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은행들의 무수익여신(NPL)까지 계속 증가해 은행들이 모기지 대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이에 따라 스페인의 주택가격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 유럽 주택시장 전망

유럽 주택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주택시장 버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sup>5</sup>, 저금리 및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어서 북유럽 국가들의 주택가격 상승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유로존의 경우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sup>6</sup>이어서 추가 금리인하 등 ECB의 금융완화정책이 유지되거나 경우에 따라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주택가격 상승세는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도이체방크는 독일의 주택가격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2014년에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독일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5%, 7대 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7.5%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남유럽 국가들의 주택시장은 ECB의 은행 건전성 평가와 자본확충 및 구조조정 작업이 완료되고, 가계부채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의 남유럽 국가들은 외자유치를 통한 주택시장 활성화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현재 스페인 정부는 스페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처음 5년 동안 소득세 감면 혜택<sup>7</sup>을 제공하고, 자국의 부동산 시장에 50만 유로 이상 투자하는 개인에게는 거주비자(residency visa)를 발급해주고 있다.

<sup>5</sup> 최근 들어 영국의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OECD는 영국정부의 적극적인 주택경기 부양책이 높아 평가하면서도 또 다른 주택버블 가능성을 우려.

<sup>6</sup> 2013년 12월 유로존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0.8%로 11월의 0.9%보다 더 하락한 수준.

<sup>7</sup>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린 저명인사 중 영국의 축구스타 데이비드 베컴(David Beckham)의 이름을 따 일명 「베컴법(Beckham Law)」이라 부름.

## 주택시장 침체는 실물경기에 악영향

주택시장이 살아나지 않고서 유로존 경제가 예년의 성장세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특히 부동산 및 건설 부문에 경제성장을 크게 의존해온 남유럽 국가들은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자산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장기 불황에 빠질 위험성마저 있다.

또한 주택가격 하락은 은행의 부실자산 증가를 초래한다. 은행이 보유 중인 압류주택의 가격이 하락하고 무수익여신이 증가할 경우 은행의 재무건전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2014년 ECB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남유럽 은행들은 자본 부족으로 대규모 자본확충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미국의 양적완화(QE) 축소가 본격화되어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ECB가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부실은행들에서 뱅크런 등 은행위기가 발생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수요 및 투자 부진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내수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주택시장 침체로 건설투자가 부진해지면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물론 건축자재와 가전용 가전기기 등 관련 제조업들마저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이다.

## 기업들은 유럽 주택시장의 양극화를 적극 활용할 필요

지금까지 유럽 주택가격의 추이와 전망을 살펴보았다. 한국기업들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기업들은 유럽 주택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택가격 상승은 일반적으로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진다. 따라서 주택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영국과 독일 등 북유럽 국가에서 민간소비가 본격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경기의 경제성장 견인력을 비교해보면, OECD 국가 중 영국이 주택가격과 민간소비의 상관관계가 가장 강하다.<sup>8</sup> 영국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주택건설이 10만 호 증가하면 GDP 총량은 1% 증가하고, 주택 1채 건축 시 고용은 1.5명 증가하며,

<sup>8</sup> 실질주택가격 상승률과 민간소비의 상관관계 지수는 영국 0.83, 핀란드 0.73, 네덜란드 0.71, 일본 0.59, 미국 0.55, 스페인 0.54, 프랑스 0.49, 독일 0.44, 이탈리아 0.12 내외.

건축비용 1파운드 증가 시 부가가치는 2.09파운드 증가한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은 주택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영국과 독일 등의 소비시장을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

반면, 주택시장 침체로 고전 중인 남유럽 지역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및 건설 관련 투자를 고려해볼 만하다. 자본확충 압력에 직면해 있는 남유럽 은행들은 부동산 매각 등 부실자산 정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국계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투자은행들은 유럽 은행들의 부실자산 매입을 위해 벌처펀드(vulture funds)를 조성하는 등 영업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중남미 등 외국인 투자자들도 남유럽 은행 및 부동산과 건설 부문 투자를 통한 수익창출 기회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들 분야의 자산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남미계 자본은 오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스페인 은행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베네수엘라 은행인 바네스코그룹은 스페인 국영은행 중 NCG방코의 지분 88.3%를 10억 유로에 매입했으며, 2013년 9월에는 콜롬비아 백만장자인 하임 길린스키가 스페인 5위 은행인 방코사바텔을 13억 8,000만 유로에 인수하였다. 그리고 멕시코 투자자들은 2013년 12월 방코포폴라르의 지분 6%를 4억 5,000만 유로에 매입하였다.

스페인은행 이외의 분야에도 투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페루의 그루포 산토 도밍고는 스페인 부동산회사 콜로니아에 1억 유로의 자본투자를 약속했다. 멕시코 통신재벌 카를로스 슬림 역시 스페인의 경기회복을 예상하고 스페인 자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3년 10월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은 1억 1,350만 유로에 스페인 건설회사 FCC의 지분 6%를 매입해 제2대 주주가 되었으며, 2014년 1월 초에는 억만장자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도 FCC의 지분 3.1%를 사들였다. 이는 스페인 건설경기의 회복을 염두에 둔 장기적 포석의 투자라 할 수 있다. ★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 이란 핵협상과 EU의 역할

## The EU's role in Iran nuclear negotiation

On January 20<sup>th</sup>, 2014, the Joint Plan of Action on Iran's nuclear programme came into effect, two months after an initial understanding between Iran and P5+1. During the six months of this agreement, Iran is expected to halt much of its most controversial nuclear programme. In order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Plan of Action, a Joint Commission has been established, of which the EU is a part and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One needs to look at the saga of Iran's nuclear build-up in order to understand the EU's importance. The EU has a long history in negotiating Iran's nuclear development but also has played an important balancing role. For instance, the EU made an effective use of 'carrot-and-stick' approach, during the 2002 Iran nuclear crisis and in the lead-up to the Joint Plan of Action, helping to ease the tension between the US and Iran. If possible, it is worth considering the involvement of other nations in the Middle East to resolve the current issue surrounding Iran's nuclear programme. In other words, it is conceivable that in addition to P5+1 and the EU, all the parties in the Middle East come together to participate in building mutual trust. The European experience tells us that the peaceful co-existence in the Middle East is possible.

### 첫 단추를 낀 이란 핵협상

이란 핵협상에 대한 잠정 타결안(공동행동계획, Joint Plan of Action)이 2014년 1월 20일부터 실행되었다. 2013년 11월 24일 이란과 P5+1(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합의안에 서명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잠정 합의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이란은 7월 20일까지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새로운 협상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관련 협상국들은 매달 협의를 거쳐 포괄적인 해결책(Comprehensive Solution)을 마련할 계획이다.

### ★ 이란과 P5+1 잠정 합의 내용

구분	이행사항
이란	1. IAEA 사찰 수용
	2. 20% 이상 농축 우라늄 전량 중화
	3. 5% 이상 농축 우라늄 생산 중단
	4.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건립 중단
	5. 이라크 중수로 건설 중단
P5+1	1. 석유 자산 42억 달러 동결 해제
	2.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 등 수출 허용
	3. 금, 귀금속 등 거래 제재 중단

주: 합의 이행 기간 동안 추가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  
자료: BBC News

잠정 타결안의 핵심 내용은 이란의 주요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허용과 핵무기 제조에 전용 가능한 20% 이상 농축 우라늄을 전량 중화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이란은 5% 이상 농축 우라늄 생산을 중단해야 하고,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를 더 이상 건립해서는 안 된다. 이에 상응하여 P5+1은 이란에 대한 산업 및 금융제재의 일부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란의 석유 수출과 관련된 해외 자산 42억 달러의 동결을 해제하고,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 등의 수출 제재를 중단했다. 이러한 제재 완화로 이란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61억 달러에 달한다.

이란의 합의 이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도 눈에 띈다. 이란과 P5+1은 해외에 동결된 이란 석유 수출대금 42억 달러를 여덟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방식에 합의했다.<sup>1</sup>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지만, 과연 42억 달러를 지급하면서 6개월 동안 이란 핵시설을 완전하고 투명하게 사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sup>2</sup>

<sup>1</sup> 2월 1일 5억 5,000만 달러 지급을 시작으로 3월 1일에는 이란이 20% 이상 농축 우라늄의 절반을 중화시킨다는 조건하에 4억 5,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함. 이러한 분할 지급 방식에 따라 이란이 이행 조치를 완결하는 7월 20일에는 5억 5,000만 달러를 최종 지급할 예정.

<sup>2</sup> Cordesman, H. (2014). The P5+1 and Iranian Joint Plan of Action on the Islamic Republic of Iran's Nuclear Program: Assessing the details and risks. CSIS.

### EU의 역할에 주목하는 이유

이란의 합의 이행을 검증하기 위해 P5+1과 EU는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상 주체인 P5+1과 이란 사이에서 EU의 중립적인 역할과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란의 핵개발 과정과 의도를 살펴보면, EU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이란은 1970년대 초 팔레비 왕조 시절에 근대화화 상징으로 페르시아만 부셰르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이란과 12기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동시에 이란은 원자력 개발에 관련된 국제규범도 성실히 준수했다.<sup>3</sup> 이란이 일찌감치 원자력 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대체자원의 개발 필요성 때문이었다. 팔레비 정권은 1973년 1차 석유회기를 경험하면서 석유 매장량 고갈에 대비한 에너지원 확보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중동지역 내에서 이란이 패권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자원 강국으로 부상하는 사우디를 견제하고, 이스라엘의 핵개발에 대항할 필요성을 느낀 이란은 원자력 발전과 별도로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고농축 우라늄 및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핵연료 주기(nuclear fuel cycle)의 완성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독일과 프랑스 등의 기술 자문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1970년대에 본격화되었던 이란의 핵개발 노력은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신정정치를 강화한 호메이니는 핵개발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핵 프로그램 협력도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란은 1980~1988년 이란-이라크 전쟁을 치르면서 핵무기 개발을 비밀리에 재추진하였다. 이 과정에 러시아가 깊숙이 개입했다. 이란과 러시아는 1995년 초에 8억 달러 상당의 이란 경수로 건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미국은 프랑스, 독일 등에 이란에 대한 핵 프로그램 기술을 제공하지 말 것을 강력 권고하였다.

<sup>3</sup> 이란은 1968년 7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하고, 1974년 5월에는 국제원자력기구와 안전보장조치협정을 체결.

이처럼 이란의 핵개발 과정에는 미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상당부분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미국과 EU는 이란 핵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2002년부터<sup>4</sup> 해결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2002년 1월 연두교서에서 이란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하고, 군사적 해결 방법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EU는 협상을 통한 외교적인 해결 방법을 강조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 연구에 중점을 두어 온 유럽 국가들로서는 당연한 해법 제시였다. 2003년 미국과 이란의 위기가 본격적으로 가열되기 시작하자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 관련 사찰을 받도록 중재안을 제시하여 미국과 이란으로부터 동의를 받아내는 등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다.

EU와 미국의 핵문제 접근 방식 차이는 이란에 대한 유럽의 경제적 접근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잠정 타결안이 실행되자마자 프랑스의 기업인 100여 명은 테헤란을 방문하여 향후 이란과의 경제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sup>5</sup> 이러한 프랑스의 행보는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니다. EU의 협상 대상으로 나선 영국, 독일, 프랑스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 대가로 이란과의 경제협력, WTO 가입 허용, 상용항공기 판매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시해왔다. 실제로 이번 잠정 타결안을 보면, EU는 그동안의 이란 금융제재에 대한 기준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는 이란 제재의 숨통을 틔우는 데 있어서 EU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협상에 의한 외교적 해결을 지향하는 EU가 이란 핵문제에 대해 무조건 유화적인 것은 아니다. EU는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통한 외교적 압박에도 적극 참여하였다.<sup>6</sup>

<sup>4</sup> 이란 핵문제는 2002년 이란 반정부단체인 '이란국민저항협의회(NCR: National Council of Resistance)'가 이란 정부의 핵연료 생산을 위한 우라늄 농축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본격화.

<sup>5</sup> French business delegation aims for early bird advantage in Iran. (2014. 2. 2.). *Financial Times*.

<sup>6</sup> 이번 이란 핵협상 잠정 타결 과정에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한 캐서린 애쉬튼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EU의 이란 접근이 "압박과 대화"의 이중 접근임을 명확히 밝혀왔음(Ashton, C. (2011. 3. 9.). The EU's approach to Iran. European Parliament.).





이란 핵 관련 경제제재안이 유엔안보리에 상정 및 통과되는 과정에서 미국과 EU는 적극적인 신뢰를 보여왔다.<sup>7</sup> 결과적으로, 2002년 이란 핵 위기 이후 잠정 협상안 타결에 이르기까지 EU의 접근 방법은 외교적 협상을 근간으로 한 “당근과 채찍”의 적절한 배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협상 진전뿐만 아니라 강경일변도로 치달았던 미국과 이란의 대치 국면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 완전 타결의 의미와 가능성

문제는 잠정 타결안이 만료되는 7월 20일 전후다. 포괄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잠정 타결안 연장도 어렵게 될 경우 P5+1은 기존의 이란 제재 상태로 돌아가려 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제재를 강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미 의회는 이미 이란 핵협상 결렬에 대비하여 새로운 제재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sup>8</sup>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이 전개된다면, 이란 핵협상은 다시 미궁에 빠져들 것이다.

이란 핵협상을 완전 타결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이란의 ‘비밀스러운’ 핵무기 제조 가능성을 완전 차단해야 한다. 이란은 잠정 타결에 따른 6개월간의 이란 핵 시설 사찰 수용을 통해 EU와 미국 등 서방 측의 불신을 없앨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sup>9</sup> 그리고 5%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해 원자력 발전만 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자국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지 않으면서 핵무기 제조 의사가 없음을 밝혀왔다. 따라서 이란은 7월 20일이 되면, IAEA와

### ★ 이란 핵 관련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안 주요 내용

구분	수출통제	금융제재
1737호 (’06. 12. 13.)	농축 및 재처리, 중수로 관련 활동 금지, 미사일체계 개발 관련 부품의 이란 수출 금지 등	이란 핵 활동 유관 10개 단체 및 12명의 자연인 자산 동결
1747호 (’07. 3. 24.)	이란과의 재래식 무기 관련 수출입 금지 등(관련 기술, 서비스 지원 등 포함)	자산 동결 대상 13개 단체 및 자연인 15명 추가
1803호 (’08. 3. 3.)	핵, 미사일 관련 대이란 수출 금지 범위 확대	자산 동결 대상 12개 단체 추가. 멜리, 사데라트 은행 포함 자국 내 이란 은행 활동 유의
1835호 (’08. 9. 27.)	추가 제재 내용 없이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미국, 영국 등 서방 측은 유엔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 강화	
1929호 (’10. 6. 9.)	추가 제재 결의안으로 이란 은행들에 대한 제재, 중앙은행을 포함한 모든 이란 은행들의 거래 감시, 이란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 연장 등	

주: 제재 결의안 1803호에는 이란 관련 항공 및 선박 화물 검색 포함  
자료: United Nations

EU 조사단을 통해 모든 핵 관련 시설의 검증을 받았으니 핵문제와 관련된 모든 제재를 해제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인 포괄적 해결책에 포함되는 우라늄 농축 관리에 관하여 이란과 미국이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란은 IAEA에 자국의 원자력 관련 보고를 성실히 하겠다는 전제하에 7월 20일 이후에도 저농축 우라늄 권리를 보장받으려 할 것이다. 반면,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미국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자체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sup>10</sup> 미국은 이란에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한 언제든지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중동 모든 국가(오만 제외)들의 공통된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sup>10</sup> 핵무기 제조 원료인 우라늄은 농축 제조 시설을 여러 곳에 분산 은닉할 수 있어 핵사찰이나 첩보위성 등으로 탐지하기 어려운 반면, 플루토늄은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외부 노출 가능성이 높음.

현재로서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 이란은 잠정 타결안 종료 이후에도 5%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사찰 허용을 용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미국과 EU 등 국제사회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잠정 타결안에 따라 이란 제재를 지속 완화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찰을 허용하는 이란에 대해 다시 강력한 제재를 부여하는 것은 또한 무리다. 우선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란과 다양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EU도 제재 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제한적 경제제재 완화 상태를 유지하며 이란 핵협상이 지속되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란 핵협상의 첫 단추를 낀 상태에서 미국이 다시 풀어버려 할 경우 이를 설득하는 것은 EU의 몫이 될 것이다.

EU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이란 핵문제의 완전 타결에 대한 입장과 정의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미국처럼 협상 타결의 핵심인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완전 포기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지속 사찰을 통해 이란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용인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협상 주체로 나선 영국, 프랑스, 독일의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조율도 필요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EU는 이란 핵문제의 장기화를 우려하면서도 외교적 협상을 통한 해결을 강조해왔다는 점이다. 이란 핵협상의 완전 타결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것도 이러한 EU의 평화적 접근 방법 때문이다.

### 유럽식 공존과 중동

외교 협상에서 EU의 강점은 과거 헬싱키 선언 채택 과정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유럽 33개국(알바니아 제외)과 미국, 캐나다는 1975년 7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를 개최하고, ‘상호간의 국경 존중’ 등 유럽의 안전보장 관련 문서에 서명하였다. 이를 계기로 동서 간 데탕트가 구체화되었고, 전후 유럽은 냉전에서 긴장 완화 국면

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동서독 통일의 발판을 마련했고, 지금의 EU를 탄생시키는 결정적 계기로도 작용했다.

이처럼 유럽의 공존과 통합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그 근처에 상호간의 신뢰구축(confidence building)에 대한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서 간, 특히 미국과 구소련 간의 군비 경쟁을 군비 축소로 바꾸는 데에도 헬싱키 선언 이후에 신뢰구축 조치를 이행한 유럽의 역할이 컸다. P5+1이 참여하고 있는 이란 핵협상에서도 우라늄 농축 포기뿐만 문제를 국한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만약 우라늄 포기 문제로 한정할 경우, 미국이든 이란이든 상처뿐인 협상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란과 국제사회의 신뢰구축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헬싱키 선언을 통해 축적된 국제법의 준수, 상호 무력 사용과 위협 금지 등의 신뢰구축 조치들을 이란 핵협상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이란 핵협상의 포괄적 해결책 마련 과정에 여타 중동 국가들의 참여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문제를 놓고 P5+1뿐만 아니라 EU와 중동 모든 국가들이 상호 ‘신뢰구축’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헬싱키 선언이 발표되기까지는 약 2년간의 논의 기간이 있었다. 이제 첫걸음을 뗀 이란 핵협상도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보다 완벽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유럽식 공존이 중동 평화와 공존에도 기여할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과거 동서 화해만큼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

방태섭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sup>7</sup> 이란은 세 차례의 유엔안보리 결의안 통과에 따른 제재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우라늄 농축시설 추가 증설을 발표.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와의 추가 제재 논의가 실패하더라도 영국, 프랑스 등 EU와의 협력하에 추가 결의안을 통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언급(Iran—more sanctions after new defiance? (2009. 11. 30.), BBC News.).

<sup>8</sup>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연두교서를 통해 이란 핵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미 의회가 새로운 제재안을 통과시킬 경우 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언급(The White House, (2014. 1. 28.), President Barack Obama’s state of union address.).

<sup>9</sup> Iran foreign minister: nuclear deal possible in six month. (2014. 2. 3.), Reuters.







# 리스본 조약으로 FDI 정책이 하나로 통합되는 EU

## Integration of EU's FDI policies through Treaty of Lisbon

With the EU's Lisbon Treaty, in force since December 2009, foreign direct investment fell under exclusive competence of the EU. The central goal of a new Common Commercial Policy is to activate internal and external FDI by simplifying and standardising the existing regulations and procedures. In 2012, FDI in the world amounted \$1,350.9 billion, and EU nations attracted 19.1% of this (\$258.5 billion) and EU nations' FDI outflows took up 23.2% (\$323.1 billion). However, FDI attraction and overseas investment have been concentrated on a few European nations with favourable investment environment. In order to fix such inequality of investment conditions, FDI policies are now included in the exclusive authority of EU. Yet, it is not clear whether every member state will be able to enjoy positive effects of FDI inducing economic growth as some countries lack of human resources.

### 8년 만에 마침표를 찍은 리스본 조약

2009년 12월 1일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서 경제공동체 성격이 강했던 27개의 EU 회원국들이 정치적으로 통합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모여 조약에 최종 합의 및 공식 서명함으로써 2001년에 시작된 논의가 8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리스본 조약에 따르면, EU 대통령으로 통하는 상임의장은 EU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연 4회 이상 개최되는 EU 정상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하지만 독자적인 행정 및 입법 권한은 없다. 본 조약의 특이사항은 EU 정상회의 산하의 장관급 협의 기구인 각료이사회가 만장일치제를 포기하고 이중다수결제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중다수결제란 회원국의 55% 이상이 찬성하고, 찬성 국가의 인구 수가 EU 전체 인구의 65%를 넘으면 각료이사회를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EU의 주요 안건 처리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 다른 특이사항은 공동통상정책(Common Commercial Policy)의 기존 범위를 확장시켜, 그동안 개별 회원국 소관이었던 외국인직접투자(FDI) 관련 정책을 EU의 배타적 권한 적용범위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곧, EU가 리스본 조약을 통해서 EU 역내 및 역외 FDI 정책에서 독점적인 영향력을 발휘함과 동시에, 운영방안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다. 새로운 공동 FDI 정책의

주요 목적은 기존 규제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형화함으로써 역내 및 역외 FDI를 보다 활성화하는 데 있다.

### FDI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FDI와 경제성장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는 학계의 오랜 연구 관심 대상이다.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려면 FDI가 발생하는 경위, 다시 말해 정보가 부족하고 리스크도 큰 해외로 진출하려는 목적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 더닝의 절충이론이 이 목적을 잘 설명해준다.<sup>1</sup> 절충이론은 OLI 패러다임이라고도 불리는데, O는 소유의 우위(Ownership Advantage), L은 지역의 우위(Location Advantage), 그리고 I는 내재화의 우위(Internalization Advantage)를 뜻한다.

먼저 소유의 우위란, 특정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이나 상품을 소유함으로써 경쟁 기업들보다 우위를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앞선 기술의 상품을 보유한 기업일수록 내수시장을 넘어 보다 넓은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애플이나 삼성은 자사의 혁신적인 스마트폰 상품을 통해서 미국, 한국 뿐 아니라 중국이나 중남미 시장을 공략하길 원한다.

<sup>1</sup> Dunning, J. H. (1977). Trade, location of economic activity and the MNE: A search for an eclectic approach, in Ohlin, B., Hesselborn, P. O. & Wijkman, P. O. (Eds.), *The International Allocation of Economic Activity*, Mc Millan.

이처럼 특정 기업만이 보유할 수 있는 경쟁력이 바로 소유의 우위이며, 소유의 우위를 통한 시장 지배력 확장 전략이 FDI를 유발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FDI는 해외진출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에서 비롯된다. 이점이라 하면 저렴한 생산비용, 우수한 인적자원, 과학기술 인프라, 각종 천연자원 및 거대한 소비시장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중국을 대신할 차세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멕시코는 임금 대비 우수한 생산성을 바탕으로 다국적 제조업체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또한 다국적기업에 있어 멕시코는 생산 효율성뿐만이 아닌, 북미와 중미를 아우르는 거대 경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우위가 있는 지역이다. 이와 같이, 해외지역으로 진출하여 모국에서 얻을 수 없는 이점들을 확보하고, 생산 효율성 제고 및 매출 증대를 꾀하려는 전략은 지역의 우위에서 비롯된다.

마지막으로 내재화의 우위는 본국에서 수출해도 될 일을 왜 해외에 직접 투자해서 리스크를 감수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해준다. 수출이 아닌,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가치사슬이 한 지역에 내재화되어 있는 것이 제품 기획 및 생산에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국적기업들은 중국에 제조공장을 짓기도 하지만 가까운 인근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해당 지역에서 개발한 노하우나 아이디어를 생산단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획에서 생산, 판매, 프로모션까지 한 지역에서 완비해 원가를 절감함으로써 경쟁기업들보다 우위를 점하는 것이 내재화의 우위다. 이처럼 FDI는 생산효율성 제고 및 성장기회 포착이 주요 목적이며, 이는 곧 매출 증대와 모국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다른 한편으로, FDI는 모국뿐만이 아닌 투자유치국의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 다국적기업의 진출은 유치국의 투자를 증진시키고 고용과 소비를 늘리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국적기업들의 선진기술과 정보 등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며, 이들과의 경쟁은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 이에 많은 신흥국들이 다국적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각종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EU 역시 리스본 조약을 통해서 회원국들 간에 균등한 투자유치 및 원활한 해외진출을 위한 통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 EU의 FDI 유치 및 해외투자 현황

전 세계 FDI 유치 및 해외투자에 있어서 EU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UNCTAD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 세계 국가들이 유치한 FDI는 약 1조 3,509억 달러이며, 그중 EU 국가들의 비중은 19.1%인 약 2,585억 달러를 차지한다. 또한 2012년 전 세계 국가들의 해외투자는 약 1조 3,910억 달러이며, EU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3.2%인 약 3,231억 달러다. 뿐만 아니라 해외자산 규모 기준으로 기업 순위를 매겼을 때, 상위 20위권의 비(非)금융 다국적기업들 중 유럽 기업들은 무려 14개나 된다.

### ★ 해외자산 규모 기준 비금융 다국적기업 순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기업	국가	해외자산
1	제너럴 일렉트릭	미국	338,157
2	로열더치셸	영국	307,938
3	BP	영국	270,247
4	도요타	일본	233,193
5	토탈	프랑스	214,507
6	엑스모빌	미국	214,349
7	보다폰	영국	199,003
8	GDF 수에즈	프랑스	175,057
9	세브런	미국	158,865
10	폭스바겐	독일	158,046
11	에니	이탈리아	133,445
12	네슬레	스위스	132,686
13	에넬	이탈리아	132,231
14	E.ON AG	독일	128,310
15	엔호이저부시인베브	벨기에	115,913
16	아르셀로미탈	룩셈부르크	112,239
17	지멘스	독일	111,570
18	혼다	일본	110,142
19	미쓰비시 모터스	일본	109,657
20	프랑스 전력공사(EDF SA)	프랑스	103,015

자료: UNCTAD (2013). World Investment Report.







하지만 앞서 밝혔듯이, EU의 역내 및 역외 투자 관련 정책은 개별 회원국 소관사항이었기 때문에 FDI 유치 및 해외투자는 대외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소수의 유럽 국가들에 집중되어왔고, 특정 국가를 제외한 기타 유럽 국가들은 투자의 규모나 협정의 질이 열악했다. EU라는 한 개의 우산 아래 있으면서도 FDI에 관해서는 회원국들끼리 혼선이 잦았으며, 무엇보다도 공동체로서의 국제적 위상이나 영향력, 그리고 투자체결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 ★ 2012년 EU의 FDI 유치 및 해외투자 유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투자유치액	비중	국가	해외투자액	비중
1	영국	62,350.8	24.1	영국	71,414.9	22.1
2	아일랜드	29,318.0	11.4	독일	66,925.6	20.7
3	룩셈부르크	27,877.7	10.8	프랑스	37,196.7	11.5
4	스페인	27,749.9	10.7	스웨덴	33,428.2	10.3
5	프랑스	25,093.3	9.7	이탈리아	30,397.3	9.4
6	스웨덴	13,711.4	5.3	아일랜드	18,965.8	5.9
7	헝가리	13,469.0	5.2	룩셈부르크	17,272.9	5.3
8	체코	10,592.5	4.1	오스트리아	16,648.0	5.2
9	이탈리아	9,624.9	3.7	벨기에	14,668.0	4.5
10	포르투갈	8,915.5	3.5	헝가리	10,578.4	3.3
기타 EU 회원국		29,810.9	11.5	기타 EU 회원국	5,635.1	1.7
EU 27 합계		258,514.0	100	EU 27 합계	323,131.0	100

자료: UNCTAD (2013). World Investment Report.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다국적기업들의 EU 투자는 전체의 절반 이상이 영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스페인에 집중되어 있으며, 상당부분의 투자는 영국이 유치했다. EU 국가들의 해외투자 활동 역시 특정 소수 국가들이 주로 주도했는데, 전체의 20% 가까운 해외투자 역시 주체는 영국이었다.

#### ★ 2012년 EU의 그린필드 투자유치 및 해외투자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그린필드 투자유치액	비중	국가	그린필드 해외투자액	비중
1	영국	41,177.0	32.6	독일	49,478.9	23.8
2	폴란드	11,533.1	9.1	영국	35,005.5	16.8
3	스페인	11,367.5	9.0	프랑스	27,271.7	13.1
4	루마니아	9,888.0	7.8	이탈리아	21,387.4	10.3
5	독일	8,476.7	6.7	스페인	17,378.6	8.4
6	프랑스	7,017.4	5.5	네덜란드	9,149.1	4.4
7	아일랜드	5,022.0	4.0	덴마크	6,628.6	3.2
8	네덜란드	4,026.1	3.2	룩셈부르크	5,699.0	2.7
9	이탈리아	4,012.9	3.2	스웨덴	5,693.6	2.7
10	불가리아	2,756.0	2.2	아일랜드	5,641.1	2.7
기타 EU 회원국		21,190.6	16.8	기타 EU 회원국	24,599.4	11.8
EU 27 합계		126,467.0	100	EU 27 합계	207,932.9	100

자료: UNCTAD (2013). World Investment Report.

외국기업들이 공장을 신설하거나 투자를 늘려 유형 및 무형의 사업이 새로 창출되는 경우를 통칭하는 그린필드 FDI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한데, 그린필드 FDI는 투자유치국의 고용 창출 및 경제성장에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전 세계 다국적기업들의 공장설립이나 설비 투자는 EU 국가들 중에서도 영국에 집중되고 있다. 전체 투자액 중 32.6%에 달하는 압도적인 규모다. 이러한 불균등한 투자 현황을 개선하고자 FDI 관련 정책을 EU의 배타적 권한 적용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다. 물론 리스본 조약의 새로운 FDI 정책에 모든 회원국들이 반색을 보인 것은 아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및 스페인 같은 유럽 선진국들은 투자유치나 해외진출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스본 조약으로 인해 공동체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EU에 대한 투자 및 EU발 투자가 증대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기존 유럽 선진국들 역시 이런 규모의 경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 FDI의 긍정적 효과가 균등할지는 미지수

리스본 조약이 EU 역내 및 역외의 투자 활동을 활성화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FDI의 긍정적 효과를 모든 회원국들이 누리게 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각 회원국들의 인적자원 수준이 불균등하기 때문이다.

유럽 30개국을 연구한 경영학자 무라드 다클리와 더크 클르크는 우수한 인적자원이란 다양한 형태의 지식이나 제품을 현지 시장에 적합하게 가공해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다.<sup>2</sup> 따라서 증가한 FDI나 해외투자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선진 기술, 정보, 혹은 경쟁으로부터 극대화된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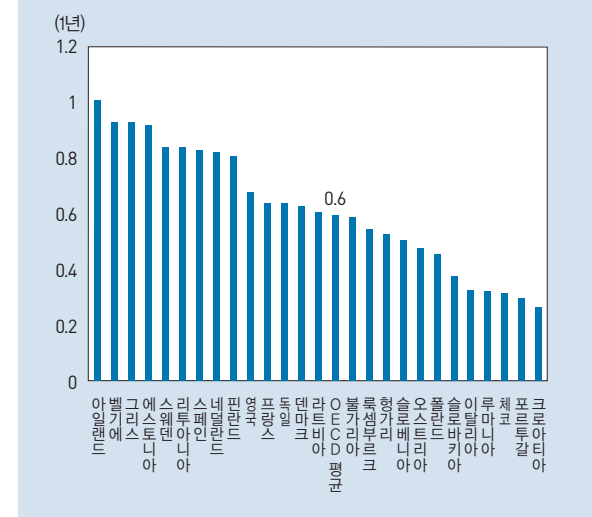
경제학자들은 한 나라의 인적자원을 측정할 때 대리변수로서 그 나라 국민의 평균 교육이수(educational attainment) 기간을 활용한다. 2010년 기준 OECD 국가의 대학교 이상 평균 고등교육이수 기간은 0.6년이다. 하지만 절반 가까운 EU 회원국들이 이 수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U 집행위원회의 배타적 권한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리스본 조약은 회원국 의회의 역외 무역 정책에 대한 비준 권한을 축소시킨 대신, 유럽의회의 권한을 상당히 강화했다. 이는 대외 통상과 관련해 개별 회원국 주권 침해라는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회원국이나 유럽의회가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상당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EU는 리스본 조약의 구체화와 더불어 회원국들의 교육 및 인적자원 강화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

주대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sup>2</sup> Dakhli, M. & De Clercq, D. (2004). Human capital, social capital, and innovation: A multi-country study.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16(2), 107-128.

#### ★ 2010년 EU 국가들의 평균 고등교육이수 기간



주: 대학교 이상의 평균 고등교육이수 기간

자료: Barro, R. & Lee, J. W. (2010). A new data set of educational attainment in the world, 1950-2010 (Working Paper No.15902). NBER.





# 글로벌 가치사슬과 동유럽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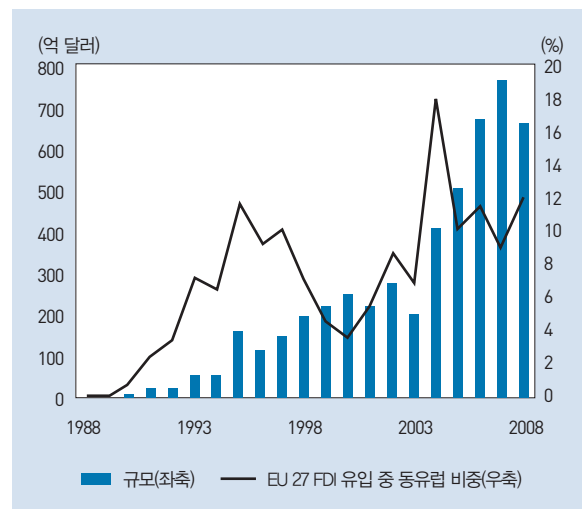
## Global Value Chain and Eastern Europe's manufacturing sector

In the 1990s, communist states of Eastern Europe started liberalising their economies. 10 and 2 nations among them joined the European Union in 2004 and 2007 respectively, leading to the enhancement of their institutional and political stability as well as the lowering of trade barriers. With improvement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inward FDI in Eastern Europe increased by 37.1% CAGR between 1988 and 2008, and their proportion in Europe's total inward FDI increased from 0.2% to 12.0% during the same period. The inflow of manufacturing FDI to Eastern Europe, in particular,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tructural changes of these economies. Firms interested in tapping into Western European market built their production bases in Eastern Europe and as a result, the proportion of exports in the latter's economies increased from 49.6% in 1995 to 63.8% in 2010. Some of the bases were built to meet the rising demand of durable consumer goods in Western Europe and the proportion of high-tech products in manufacturing exports of Eastern Europe increased from 4.3% in 1995 to 15.7% in 2010 as a result. As shown above, Eastern Europe became an integral part of Global Value Chain and the proportion of value added from abroad in Eastern Europe's exports increased from 21% in 1995 to 34% in 2007. However, in the aftermath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re have been growing concerns on whether their involvement in Global Value Chain can be maintained.

### 동유럽 경제를 이끌어온 글로벌 가치사슬

1989년 동서독을 가로막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냉전체제가 막을 내렸다.<sup>1</sup> 1990년대 초부터 동유럽의 공산국가들이 경제 개방을 표방하며 개혁을 추진하였고, 저비용 생산기지를 모색하던 해외투자자들은 동유럽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어 2004년과 2007년에 각각 10개와 2개의 동유럽 국가가 EU에 가입하면서 제도적, 정치적 안정성이 대폭 개선되고 무역장벽도 낮아졌다. 사업환경이 개선되자 동유럽에 대한 FDI가 1988년

###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동유럽으로 유입된 FDI



자료: UNCTAD

1억 2,000만 달러에서 2008년 653억 6,000만 달러로 20년간 연평균(CAGR) 37.1% 증가하였다. EU로 유입된 FDI 중 동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0.2%에서 12.0%로 확대되었다.<sup>2</sup>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아시아의 신흥공업경제국(NIEs)과 중국이 낮은 임금을 앞세워 주요 생산기지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유럽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었다. 이는 동유럽이 독일, 프랑스 등 세계 최대 시장들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와 언어 측면에서 서방기업들이 동아시아보다 동유럽을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1989년 미국기업 제너럴 일렉트릭은 철의 장막이 걷히자마자 헝가리 조명기구 제조업체인 텅스램을 인수하였고 이어 필립스, 지멘스 등 글로벌 전자전기업체도 동유럽에 생산기지를 구축하였다. 1990년대 초 폭스바겐은 슬로바키아와 폴란드에 공장을 세웠고, 체코 자동차 회사인 스코다를 인수하였다. 이어 피아트, 포드, 스즈키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도 앞다투어 동유럽에 생산기지를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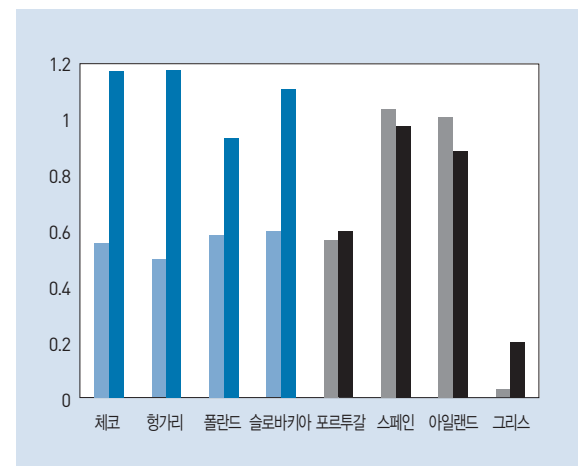
동유럽으로 유입된 제조업 FDI는 동유럽 경제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서유럽 등 선진국 시장을 공략한 기업들이 동유럽에 생산기지를 구축한 결과 동유럽 경제에서

<sup>1</sup> 본 원고에서 서유럽은 2004년 이전에 EU에 가입한 15개 국가(EU 15)를, 동유럽은 2004년 이후 EU에 가입한 12개 국가(EU 12)를 지칭하며, 2013년에 가입한 크로아티아는 분석에서 제외.

<sup>2</sup> EU 역내 FDI도 포함.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49.6%에서 2010년 63.8%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당시 서유럽에서 소비가 급증한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를 생산하는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동유럽의 제조업 수출에서 하이테크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4.3%에서 2010년 15.7%로 급증하였다.<sup>3</sup> 이 기간 동안 동유럽 주요국에서는 지식집약적 제조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가 높아졌는데, 이는 남유럽 국가들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 ★ 지식집약적 제조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 (1995년 →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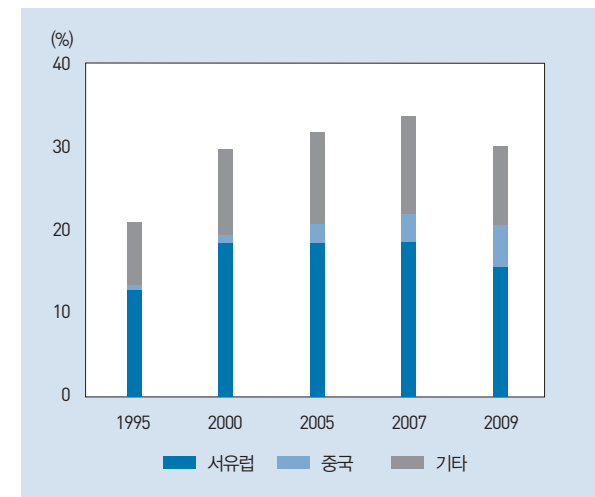


주: 지수가 1보다 크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  
자료: Augustyniak, B. et al. (2013), German-Central European supply chain-cluster report(IMF Country Report No. 13/263), IMF.

1990년대부터 생산 공정별로 가장 효율적인 국가에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지난 20여년간 동유럽 투자의 키워드는 '오프쇼어링'이었다. 동유럽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포함되면서 동유럽 수출 중 해외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비중은 1995년 21%에서 2007년 34%로 증가하였다. 특히 서유럽 기업들이 동유럽에 대거 진출한 결과, 동유럽 수출 중 서유럽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비중이 같은 기간 13%에서 19%로 증가하였다.

<sup>3</sup> EU 12개국의 단순 평균이며, 1995년 하이테크 제품 수출 자료는 10개국 대상(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B).

### ★ 동유럽 수출 중 해외 발생 부가가치 비중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2), European Competitiveness Report 2012.

2000년대에는 중국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면서 동유럽 수출 가운데 중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해외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최고치를 기록한 2007년, 동유럽 주요 수출품목의 서유럽 발생 부가가치 비중은 운송기기(27%), 기계(22%), 전자 및 광학장비(22%), 화학제품(17%) 순으로 나타났다. 운송기기 제품의 서유럽 발생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이유는 독일 자동차 회사의 투자 때문이다. 2000년대 초중반에 동유럽 국가들은 교육 수준이 높은 인적자원, 자동차 제조경험, 낮은 법인세<sup>4</sup>와 독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노동력<sup>5</sup>을 앞세워 독일 자동차 회사들의 투자를 대거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 결과 동유럽 주요 6개국의 자동차 생산대수가 2000년대 초에는 이탈리아를, 2000년대 말에는 프랑스를 넘어섰다.

<sup>4</sup> 2006년 기준 독일의 법인세는 38%로 헝가리(16%), 루마니아(16%), 폴란드(19%), 슬로바키아(19%), 체코(24%), 슬로베니아(24%) 등 주요 동유럽 국가 수준을 상회(KPMG Corporate Tax Rate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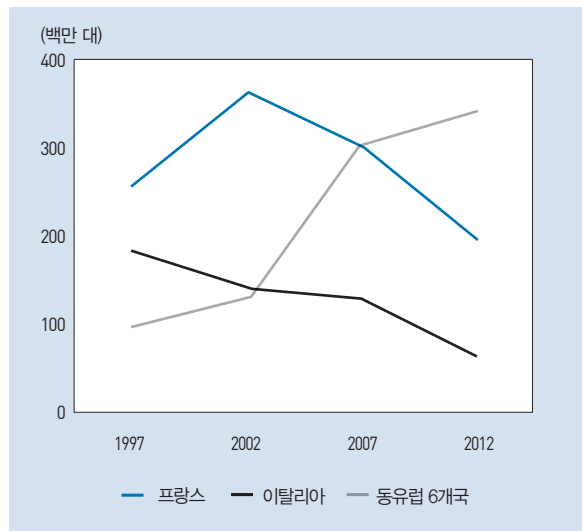
<sup>5</sup> 2006년 기준 초등학교 중 독일어를 학습하는 초등학교 비중은 헝가리 39.8%, 슬로바키아 35.1%, 슬로베니아 33.0%, 폴란드 30.5%(2005년), 체코 26.7%로 EU 27개국 평균 18.6%를 상회(Eurostat).







## ★ 자동차 생산대수



자료: 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에 직면한 동유럽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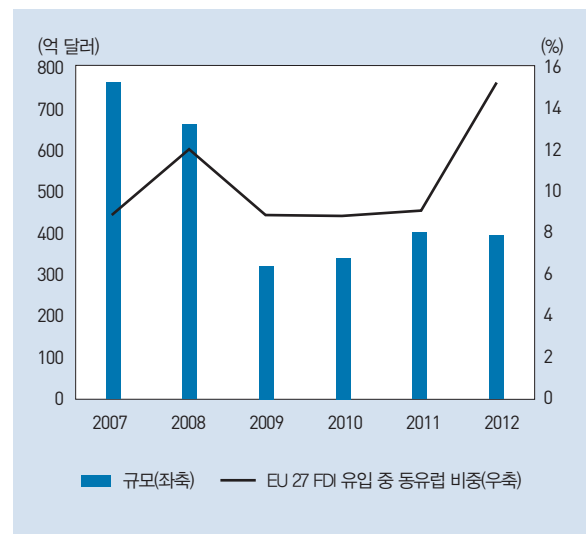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유럽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성장동력 역할을 해온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물론 2000년대 초 중반에도 동유럽과 중국의 임금 격차로 인해 동유럽 국가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지위를 빼앗길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으나 서유럽과 가깝다는 지리적·문화적 요인과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 안정적인 사업 환경이 강점으로 작용하면서 이와 같은 우려는 기우로 여겨졌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황이 급격하게 변했다. 우선 동유럽의 최대 수출시장인 유럽 소비시장이 재정위기와 함께 얼어붙었다. 동시에 브릭스(BRICs) 등 비유럽 신흥국 소비시장이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하며 동유럽의 지리적 이점이 줄어들었다. 게다가 동유럽의 자금줄이었던 서유럽 은행과 기업이 위기대응 차원에서 대출과 투자를 줄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 동유럽으로 유입된 FDI는 2009년 반 토막이 났고 아직까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비유럽 신흥국의 교육 및 기술 수준이 동유럽 국가를 빠르게 따라오고 있으며, 선진국 기업이 과거 신흥국으로 옮겼던 생산기지를 다시 본국으로 옮기는 리쇼어링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동유럽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례로 2008년 노키아는 독일 보침의 공장을 폐쇄하고 생산기지를 부분적으로 루마니아 북서부의 공업 도시인 클루즈 나포카로 옮겼다가 노키아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불과 3년 만에 루마니아 공장을 다시 폐쇄하고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동유럽의 제조업 가치사슬에도 영향을 미쳤다. 2007년과 2009년 사이 동유럽 수출품의 서유럽 발생 부가가치 비중이 3%p 줄어드는 등 해외 발생 부가가치 비중이 4%p 축소되었다. 수출 부가가치에 대한 시계열 자료가 불충분해 이와 같은 현상이 중장기 추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위에 언급된 부정적인 요인들로 인해 동유럽의 제조기지 매력도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컨설팅사인 딜로이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글로벌 기업의 CEO들은 폴란드의 제조업 경쟁력이 2012년 14위에서 2017년 18위로, 체코의 제조업 경쟁력이 19위에서 22위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sup>6</sup>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유럽으로 유입된 FDI



자료: UNCTAD

<sup>6</sup> Deloitte & Council on Competitiveness (2012). 2013 Glob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Index.

## 변화를 모색하는 동유럽 경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유럽 국가들의 정부는 자국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생산 부분에만 포함되어서는 지속 성장이 어렵다는 점을 깨달았다. 동유럽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과거 선진국의 생산역량 및 기술을 자국으로 들여오는 '오프쇼어링'에서 자체적으로 제품 및 사업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혁신'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동유럽 각국 정부는 생산 전무형활동(R&D와 디자인)과 생산 후 무형활동(마케팅과 IT 서비스)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예로, 2012년 7월 체코는 제조업에 국한되어 있던 세제혜택 및 투자 보조금을 소프트웨어 개발 등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센터와 R&D 등 기술센터로 확대 적용하였다.<sup>7</sup>

동유럽은 여타 신흥국에 비해 높은 수준의 R&D 인프라 시설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가치사슬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유리하다. 2013년 글로벌혁신지수<sup>8</sup>에서 모든 동유럽 국가가 총 142개 국가 중 상위 50위에 포함되었다. 7개 동유럽 국가는 산업 고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중국(35위)보다 높게 랭크되어 있다. 또한 동유럽은 뛰어난 IT 기술인재를 보유하고 있는데, 2013년 구글이 전 세계 프로그래머를 대상으로 개최한 프로그래밍 대회(Code Jam)에서 마지막 남은 24명 중 16명이 동유럽 출신이었으며, 2013년 ACM 국제대학생 프로그래밍 대회의 13명 우승자 중 8명이 동유럽 출신이었다.<sup>9</sup> 이러한 우수인재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동유럽 IT 산업에서는 다수의 글로벌 브랜드가 탄생하고 있다. 2003년 에스토니아에서 개발된 인터넷 음성 서비스인 스카이프와 2009년 헝가리에서 개발된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인 프레지가 대표적인 예다.

동유럽 국가들은 각기 다른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과학교육 수준이 낮지만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폴란드는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과 바이오 산업에서 비교우위가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은 동유럽 정부의 산업 정책과 국가별 강점을 이해한 후 동유럽의 고부가가치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고려해봐야 한다. 또한 동유럽 국가들의 글로벌 가치사슬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시사점을 찾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

## ★ 주요 동유럽 국가의 고부가가치 산업 개발 수준

구분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제조업	선진자동차	●	●	●	●	○	○
	항공	●	●	●		○	
	재생에너지		○	○	○	●	●
	전기공학	●	●	○	●	●	○
R&D	기계공학	●	●	●	○	●	●
	바이오기술	●	○		○		
	생명과학		●	○	●	○	
	나노기술		○			○	
서비스	제약	●	●	○	●		
	소프트웨어 개발	●	●	●	○	○	●
	소프트웨어 서비스	●	●	○	●	○	●
	선진업무처리 아웃소싱	●	●		●	○	●

주: ● 충분히 발달되어 있음  
 ● 발전 중  
 ○ 성장 가능성 보유  
 자료: Simkova, O. (2013). Central and Eastern Europe: Moving up the value chain. PwC.

김경훈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sup>7</sup> KOTRA Global Window (2012.6.11). "체코 투자 인센티브 변경사항." <<http://www.globalwindow.org>>

<sup>8</sup> Cornell University, INSEAD, WIPO (2013). The Global Innovation Index 2013.

<sup>9</sup> Ex-Soviet programmers take on India in \$48 billion market. (2013.9.17.). Bloomberg.





# 2013년 하반기 EU의 경쟁법 집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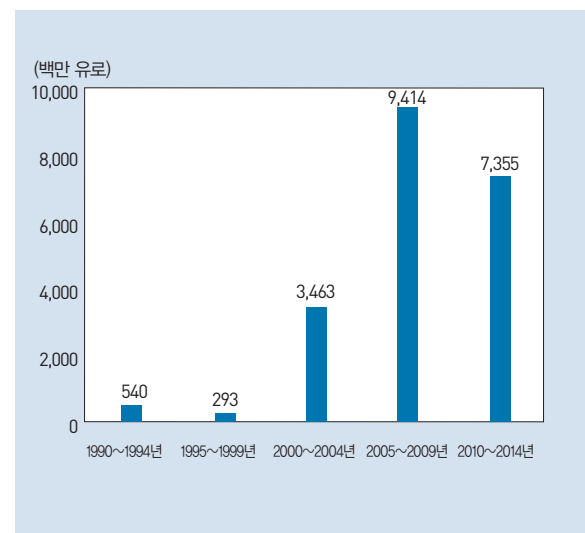
## Execution of the EU competition law in the second half of 2013

The regulatory risk arising from the aggressive execution of the competition law is rising around the world. This article covers the major trend of the EU competition law execution in the second half of 2013. The EU competition authority ① proposed legislation to facilitate damage claims by victims of antitrust violations, ② imposed fines against 6 banks for rigging Euribor and Tibor rates, ③ started proceedings of the legal sanction for ISDA and 13 global investment banks which are accused of infringing antitrust law for CDS, ④ regulated on reverse payment settlements in pharmaceutical industry, ⑤ approved Microsoft's acquisition of Nokia's mobile device business, and ⑥ consulted on commitments offered by Samsung Electronics regarding use of standard essential patents.

### EU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 동향 정리의 필요성

원칙적으로 국가의 관할권은 해당 국가의 영토 또는 국민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각국의 경쟁당국은 외국 영토에 있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서로 경쟁하듯이 적극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를 경쟁법의 역외적용이라 하는데, 각국의 경쟁당국은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조조사를 벌이기도 하고, 각국 경쟁당국별로 제재를 부과해 결과적으로 범위반 기업이 다중 제재를 받기도 한다. 세계 경쟁당국의 이러한 공격적인 법집행으로 인해 범위반 기업들이 부담하게 되는 규제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것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 ★ EU 경쟁당국의 경쟁법 과징금 집행 규모



주: 1990년부터 2014년 1월까지 집계  
자료: EU 집행위원회

한국기업들이 세계 경쟁당국의 집행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각국 경쟁당국 중 특히 EU 경쟁당국의 법집행이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취지에서 2013년 하반기 EU의 경쟁법 집행의 중요 동향을 간단히 정리해보기로 한다.

### ① 경쟁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지침 개정안 발표<sup>1</sup>

EU 경쟁당국은 2013년 6월 11일 경쟁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관한 지침(Directive)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종래 EU 사법재판소는 경쟁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위반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전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전액배상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장애와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소수의 피해자들만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었다. 지난 7년간 EU 경쟁당국의 경쟁법 위반결정 사건 중 약 25%만 후속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을 정도로 피해자 구제가 미흡했다. 이에 경쟁법의 사적 집행 가능성을 높여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EU 경쟁당국의 손해배상소송 지침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2</sup>

<sup>1</sup> European Parliament (2013. 6. 11.). European Commission proposes legislation to facilitate damage claims by victims of antitrust violations.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3-525\\_en.htm](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3-525_en.htm)>  
<sup>2</sup> 김희은 (2013). "EU의 경쟁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소송 개혁안의 키워드." 『경쟁저널』, 169, 145.

(i) 각국 법원은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증거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증거공개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손해입증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요청하는 증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ii) 각 회원국의 경쟁당국이나 법원이 특정행위가 경쟁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회원국 법원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경쟁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

(iii) 피해자가 경쟁법 위반행위를 인지하기 전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기산하지 않으며, 위반행위가 완료된 이후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시효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하며, 경쟁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시효 진행을 중지하여 조사 종결 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iv) 자진신고를 하여 벌금을 면제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일부 면제해줄 수 있다. 특정행위자가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한 경우 다른 위반행위자들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리니언시(Leniency Programme,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하여 벌금을 면제받은 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v) 손해전가의 항변(passing-on defence)과 관련하여서는 직접구매자와 간접구매자를 구분하여 항변 인정 여부를 규정하였다. 손해전가의 항변이란, 직접구매자가 카르텔로 인하여 지불한 초과가격으로 발생한 손해를 하위 유통단계의 간접구매자에게 전가하였기 때문에 직접구매자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항변을 의미한다.<sup>3</sup> 직접구매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위반행위자는 손해전가의 항변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간접구매자가 경쟁법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구매자의 가격에 초과분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초과분이 간접구매자 본인에게 전가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기준금리 담합 은행들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인 17억 유로의 벌금 부과

EU 경쟁당국은 글로벌 시장의 벤치마크 금리인 유리보(EURIBOR: 유럽 은행 간 금리)와 티보(TIBOR: 도쿄 은행 간 금리) 조작에 가담한 6개 은행들에 대해 2013년 12월 4일 사상 최대 규모인 17억 유로(약 2조 4,5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EU 경쟁당국이 금리조작 혐의로 벌금을 부과한 은행들은 독일의 도이체방크, 영국의 RBS,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너럴, 미국의 JP모건과 씨티그룹 등이다. 영국의 바클레이즈와 스위스의 UBS는 리니언시를 신청하여 유리보 담합에 관한 벌금을 면제받았으나, 지난 2012년 6월 리보(LIBOR: 런던은행 간 금리) 조작혐의로 이미 미국, 영국 금융당국으로부터 각각 4억 5,000만 달러와 15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리보, 유리보, 티보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기준금리로 사용된다. 리보금리는 대형 은행들이 단기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금리들을 기초로 산정된 평균 금리를 의미한다. 은행들이 다른 은행으로부터 단기자금을 차입할 때 지급할 금리를 은행연합회에 보고하면, 은행연합회가 최저금리와 최고금리를 제외하고 평균을 구하여 리보금리를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유리보금리는 유럽 소재 주요 은행 간 단기차입 거래에서 사용되는 금리를 기준으로, 티보금리는 일본 소재 주요 은행들의 금리를 평균하여 결정된다. 금리파생상품은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상품으로 리보, 유리보 등 벤치마크 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EU 경쟁당국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던 은행들은

<sup>3</sup> 가령, 밀가루업체들이 밀가루 가격담합을 하여 과자업체가 초과가격을 지급하고 밀가루를 구입한 경우, 과자업체는 밀가루업체들의 담합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사실상 과자가격 인상을 통해 이미 회복하였다고 볼 수 있음. 즉,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과자업체는 통상적으로 원가 인상을 이유로 과자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밀가루 가격담합의 1차 피해자인 과자업체가 밀가루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밀가루업체는 과자업체가 이미 밀가루 담합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과자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들에 전가하였으므로 과자업체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게 되는데 이를 손해전가의 항변이라 함.







단기차입금리가 상승하자, 금리를 실제보다 낮게 보고하여 기준금리와 연동된 차입금리를 낮춰 이익을 얻었다. 은행들은 기준금리 조작을 통해 (i) 단기차입 조달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얻었고, (ii) 차입금리 인하로 은행의 건전성을 가장하여 투자자들을 기만하였으며, (iii) 기준금리가 낮을 때 이익을 보는 파생상품에 투자한 후 기준금리를 떨어트려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 EU 경쟁당국의 카르텔 과징금 집행 10대 사례

(단위: 유로)

연도	기업명	분야	규모
2008	세인트 고베인	자동차 유리	880,000,000
2012	필립스	TV · 컴퓨터 모니터 브라운관	705,296,000
2012	LG 전자	TV · 컴퓨터 모니터 브라운관	687,537,000
2013	도이체방크	유리보 파생금융상품(EIRD)	465,861,000
2001	호프만 라 로슈	비타민	462,000,000
2013	소시에테 제너럴	유리보 파생금융상품(EIRD)	445,884,000
2007	지멘스	가스절연개폐장치	396,562,500
2008	필킹턴	자동차 유리	357,000,000
2009	E.ON AG	가스	320,000,000
2009	GDF 수에즈	가스	320,000,000

주: 1969년부터 2013년까지 집계  
자료: EU 집행위원회

③ CDS 시장 담합에 가담한 투자은행들에 대한 제재 절차 착수<sup>4</sup>

EU 경쟁당국은 신용파생상품인 CDS 관련 반독점 혐의로 ISDA(국제스왑 파생투자상품협회)와 메릴린치, BNP 파리바 등 13개 투자은행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제재절차에 착수하였다. EU 경쟁당국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투자은행들은 CDS 시장의 정보제공업체인 마르킷, ISDA와 결탁하여 독일증권거래소와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CDS 시장 진입을 방해하였다. CDS를 비롯한 신용파생상품은 기업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사전에 정해진 금액만큼만 손실을 부담하는 상품으로 보험과 성격이 유사하다. 투자은행들은 독일증권거래소와 시카고상품거래소가 CDS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마르킷에만 독점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U 경쟁당국은 투자은행들이 장외시장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거래소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였고, 이로 인해 시장 참가자들의 거래비용이 증가하고 금융시스템이 취약해졌다고 판단하였다. EU 경쟁당국은 투자은행들의 담합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은행 연간 수익의 약 1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④ 제약사의 역지불합의에 대해 제재<sup>5</sup>

EU 경쟁당국은 2013년 6월 19일 덴마크 제약기업인 룬드벡 등이 역지불합의(pay for delay)를 통해 복제약 출시를 지연한 행위에 대해 최초로 벌금을 부과하였다. 역지불합의란, 특허권을 보유한 제약회사와 특허권 미보유 제약회사가 특허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복제약품(generic)을 생산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권자에게 특허사용료를 지불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역지불(reverse payment)에서는 특허권자가 특허 미보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한다. 룬드벡은 항우울제인 시탈로프람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2년 복제약품의 출시를 연기하는 대가로 복제약 제조회사들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룬드벡은 폐기를 목적으로 복제약 제조사들로부터 복제약품을 구매하였으며, 이윤의 일정 비율을 복제약 제조회사에게 분배하기로 합의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룬드벡과의 역지불합의가 종료된 후 복제약 제조사가 시장에 진입하자, 영국에서는 이전보다 약 90%나 낮은 가격으로 항우울제 복제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당해 사안에서 특허권자인 룬드벡에게는 9,400만 유로(약 1,400억 원), 4개 복제약 제조사들에게는 5,200만 유로(약 78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룬드벡 사건의 주요 쟁점은 역지불합의가 경쟁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그러한 행위의 효과가 경쟁제한적인지에 대한 것이다.<sup>6</sup> EU의 기능에 관한 조약(TFF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101조 제1항은 경쟁을 금지·제한 또는 왜곡하는 목적이나 효과가 있는 사업자 간의 합의 등을 금지하고 있다. 목적 자체로 경쟁제한적이라 할 수 있는 가격담합이나 시장분할의 경우 경쟁제한적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EU 경쟁법 판례의 태도이므로, 행위의 목적 자체가 경쟁제한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EU 경쟁당국은 역지불합의로 인하여 저렴한 복제약품의 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만큼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역지불합의를 경쟁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경쟁제한적 효과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특허제도 자체가 특허권자의 허락 없는 제3자의 이용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특허권 행사의 범위에서는 역지불합의도 합법적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⑤ 마이크로소프트의 노키아 휴대전화 사업부문 인수 승인<sup>7</sup>

EU 경쟁당국은 2013년 12월 4일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의 휴대전화 및 서비스 사업 부문을 총 54억 유로(약 7조 8,000억 원)에 인수하는 합병안을 승인하였다. 노키아는 2013년 2/4분기에 휴대전화 판매가 27%나 감소하는 등 경영난을 겪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PC 사업의 쇠퇴를 만회하기 위해 모바일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모색하고 있었다. EU 경쟁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노키아의 사업 부문이 겹치는 영역이 제한적이므로 시장에서 경쟁제한적 효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하였다.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시장에 삼성, 애플 등 강력한 경쟁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합병 이후에도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EU 경쟁당국은 노키아의 스마트폰 생산시장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바일 운영체제, 애플리케이션, 이메일 서버 소프트웨어 시장 간의 수직관계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 모바일 운영체제를 다른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것을 중단할 가능성이 적으며, 안드로이드나 애플 등 다른 운영체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다른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운영체제를 공급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리케이션 공급을 제한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EU 경쟁당국은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미국 법무부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인수합병 승인에 이어 EU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아 마이크로소프트의 노키아 인수는 2014년 1/4분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sup>4</sup> European Parliament (2013. 7. 1.). European Commission sends statement of objections to 13 investment banks, ISDA and Markit in credit default swaps investigation.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3-630\\_en.htm](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3-630_en.htm)>

<sup>5</sup> European Parliament (2013. 6. 19.). European Commission fines Lundbeck and other pharma companies for delaying market entry of generic medicines.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3-563\\_en.htm](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3-563_en.htm)>

<sup>6</sup> 김희은 (2013). "유럽의 제약산업 관련 경쟁법 집행동향: Sector Inquiry, 역지불합의, 특허권 남용을 중심으로." 『경쟁저널』, 170, 135-137.

<sup>7</sup> European Parliament (2013. 12. 4.). European Commission clears acquisition of Nokia's mobile device business by Microsoft.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3-1210\\_en.htm](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3-1210_en.htm)>





# EU 역내 이주민 문제의 실상

## Immigration issue in the EU

From January 1<sup>st</sup> 2014, Romanians and Bulgarians can move around freely in the EU labour market. Once Romania and Bulgaria have been given the free movement and residence right after 7-years of grace period, some people in the UK, France, and Germany are terrified of the second tsunami of migrants. However, it needs verification whether migrants in the EU, especially those from Eastern Europe are having negative economic effects. It appears that the proportion of intra-regional migrants in the EU is insignificant at 2.7%. In addition, intra-regional migrants in the EU receive welfare benefits which is significantly lower than native people. Various studies show that migrants in the EU are not actually running down the welfare budget, but rather they are contributing to it.

### 동유럽 이주자는 EU의 ‘복지도둑’?

2014년 1월 1일부터 EU 노동시장이 루마니아인과 불가리아인에게 전면 개방되었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2007년에 EU에 가입했으나 EU 가입국에게 주어지는 자유로운 거주 이전의 권리를 7년간이나 유보 당했다. 그 이유는 2004년 폴란드 등 10개국에 EU에 가입한 이후 영국을 비롯한 기존 EU 회원국이 이주민 폭증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영국에는 약 2년 동안 무려 50만 명의 이주민이 몰려들었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대한 7년간의 유예기간이 완료되자 영국, 프랑스, 독일은 제2의 이주민 쓰나미에 대한 공포에 떨고 있다. 동유럽의 이주민들이 가뜰이나 부족한 일자리와 복지기금을 갉아먹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각종 방어정책을 내놓고 있다. 영국은 이미 2009년 2월 경제위기를 방패삼아 영국인을 우선 고용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캐머런 영국 총리는 2014년부터 입국 이후 3개월간 이주민의 실업수당 청구권을 유예했고, 추가로 주택복지를 중단하고 국민건강서비스 이용 요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아가 동유럽 이주민에 대한 전면 개방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는 선택권을 EU에 요구했다. 독일의 기독교사회당은 이주 이후 3개월 동안 육아수당 등 복지혜택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 주요국의 압박이 심해지자 EU 집행위원회도 2013년 11월 자유이주의 권리 남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권리 선용을 장려하는 타협안인 ‘5개 법규(five actions)’를 신설했다.<sup>1</sup> 첫째, 복지혜택을 노린 위장결혼(marriages of convenience)을 방지하고,

둘째, 상시거소(habitual residence)<sup>2</sup> 테스트를 실시하며, 셋째, 각 회원국의 이주민 복지를 장려하기 위해 유럽사회기금(ESF)을 배분<sup>3</sup>하고, 넷째, 각 회원국의 이주민 관리 경험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다섯째, EU의 자유이주 권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sup>4</sup>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유럽 이주민에 대한 EU 주요국의 이러한 반응이 과연 정당한지는 다시 한 번 숙고해야 한다. 당장 2014년 1월 1일 영국 정치권이 직접 확인한 것처럼 루마니아에서 출발한 영국행 비행기는 자리를 다 채우지도 못했고 140명의 승객 중에 루마니아인은 단 2명에 그쳤다. 실제로 EU 역내 이주자들이 이들 주요국에서 복지예산을 갉아먹는 ‘복지도둑’인지도 사실에 입각하여 검증해야 할 사안이다.

### 동유럽 이주자의 EU 내 인구 비중은 미미

먼저 동유럽 이주자의 인구 비중이 과연 해당 거주국의 복지를 축낼 만큼이나 되는지 살펴보자. 물론 EU 주요국들이 주장하듯이, EU 내 이주민들이 몇몇 주요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12년 기준 EU 역내 이주민(1,362만 명) 중에서 96%(1,310만 명)가 EU의 기존 15개 회원국에 몰려 있다. 이 수치는

<sup>1</sup> European Commission (2013, 11, 25.). Free movement of people: five actions to benefit citizens, growth and employment in the EU.  
<sup>2</sup> ‘비노동이주민은 가족관계 등 실질적인 이해관계의 이전이 일어난 국가(常居所)에서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  
<sup>3</sup> 2014년 1월부터 각 회원국의 원활한 이주민 수용정책을 위해 ESF의 20% 이상을 배분.  
<sup>4</sup> 47%의 EU 시민은 지역 당국이 자유이전권리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경험.

### ⑥ 삼성전자, 필수표준특허 남용 혐의 조사에 대해 시정방안 제시<sup>8</sup>

삼성전자는 2013년 10월 17일 향후 5년간 애플 등 경쟁사에 대하여 필수표준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시정방안을 EU 경쟁당국에 제시하였다. 이는 유럽에서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모바일 제품의 필수표준특허 소송을 5년 동안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애플과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EU 경쟁당국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권을 남용하여 유럽 각지에서 판매금지청구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애플의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하였다고 판단하고 2012년 12월부터 조사를 진행하였다. EU 경쟁당국은 삼성전자가 3G 표준특허<sup>9</sup>에 대해 유럽표준기구(ETSI)에 프랜드(FRAND) 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였고, 애플이 라이선스 협상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판매금지(injunction)를 청구하여 경쟁자 배제를 시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경쟁법 위반혐의가 인정될 경우 183억 달러(약 19조 4,500억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삼성전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EU 경쟁당국은 이해당사자들에게 삼성전자의 시정방안을 수용할 것인지를 질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EU 경쟁당국과 이해당사자들이 삼성전자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삼성전자의 약속(commitment)으로 조사가 종결된다.<sup>10</sup> 타협안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필수표준특허 침해를 이유로 경쟁 제품의 판매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은 제기할 수 없으나 손해배상청구 또는 방어 차원에서의 판매금지청구는 허용된다.

### 한국기업은 EU의 경쟁법 집행 강화에 유의

EU 경쟁당국의 최근 동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경쟁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였다는 점과 은행 간 금리담합 등 카르텔 사건들에 대해 사상 최대의 벌금을 부과하여 보다 강력하게 경쟁법 위반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에서도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활성화 등과 같은 사적 집행 강화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과 관련된 EU 지침 개정안은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권고안과 함께 경쟁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2013년 12월 경쟁침해 행위에 대한 구글의 개선안 수용을 거부하면서 경쟁법을 보다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으므로 EU 역내 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경쟁정책에 대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EU의 집행 동향은 한국의 경쟁당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한국에서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더욱 활성화하거나 경쟁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규제(과징금의 수준 또는 형사 처벌)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급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sup>8</sup> European Parliament (2013, 10, 17.). European Commission consults on commitments offered by Samsung Electronics regarding use of standard essential patents.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3-971\_en.htm>  
<sup>9</sup> 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표준 규격에 포함되며 제품 제조과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특허를 의미.  
<sup>10</sup> 경쟁법 사건의 합의해결제도와 관련하여 미국은 이를 동의명령제도(Consent Order), EU는 서약이행제도(Commitment Decision), 일본은 동의심결제도, 한국은 동의의결제도라고 부름.





EU가 확대되기 직전 해인 2003년에 비해 두 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EU 27개국과 EU 15개국에서 차지하는 역내 이주민의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 2012년 역내 이주민의 비중은 EU 27개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2.7%, EU 주요 15개국에서는 3.3%에 불과하다. 오히려 EU 역외 제3국 출신 이민자의 비중이 각각 4.1%, 4.9%로 역내 이주민 비중보다 더 높다.

#### ★ 2012년 EU 내 이주민 현황

구분	EU 15		EU 27	
	인구 수(명)	비중(%)	인구 수(명)	비중(%)
EU 전체 이주민	32,647	8.1	34,323	6.8
EU 역내 이주민	13,094	3.3	13,615	2.7
EU 역외 이주민	19,553	4.9	20,708	4.1
EU 전체 시민	400,842	100	503,664	100

자료: 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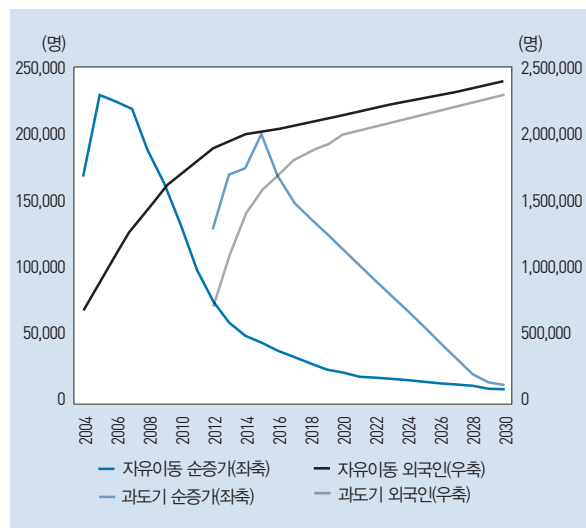
EU 확대 직후인 2004년 ‘동’에서 ‘서’로 인구이동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것처럼 과도기 특별조항<sup>5</sup>에 따라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2013년까지, 크로아티아는 2020년까지 자국민의 EU 진출이 제한되었고 그 결과 2007년 이후 인구이동 증가 추세는 현저히 약해졌다. 오히려 2010년 재정위기 이후에는 동유럽 출신 이주민의 유입 추세보다 남유럽 출신 이주민의 증가 추세가 더 급속해져 이른바 역내 이주의 트렌드가 변했다. 즉, ‘동→서’ 축에서 ‘남→북’ 축으로 바뀌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스페인과 아일랜드는 유입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은 유입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의 발단이 되었던 PIIGS 5개국 중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인의 EU 역내 이주가 급증하고 있다. 2011년 루마니아, 폴란드 등의 역내 이주 인구는 2008년에 비해

<sup>5</sup> 과도기 특별조항(Transitional arrangements)은 EU 신규 회원국의 경우 가입 후 7년간 다른 회원국으로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각각 38.4%, 63.4% 줄어든 반면,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은 약 290%, 140%, 130% 늘었다.

전문가들은 유럽 각국의 해외유입인구 증가세가 머지않아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7년에 자그레브 대학의 아이리스 골드너 랭 교수는 2004년 EU의 확대 정책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후에는 이 증가 추세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도기 특별조항 실시 여부에 따라 기한의 차이가 있긴 했지만 EU 개방 이후 4~5년 안에 이주민 유입증가세가 크게 약화되고, 10년 이후에는 외국인 이주민의 절대 규모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이주민의 과도한 유입을 막기 위한 ‘과도기 특별조항’이 실효성도 근거도 없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 ★ 동유럽 10개국의 해외이주 규모 예상



자료: Iris, G. L. (2007). Transitional arrangements in the enlarged European Union: How free is the free movement of workers? *Croatian Yearbook of European Law and Policy*, 3.

#### 이주민이 복지지출에 끼치는 영향도 미약

EU 역내 이주민은 인구 비중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EU 주요국의 복지에 미치는 실제 영향도 매우 작다. <2013년 유럽통계청 노동력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EU 역내 이주민의 취업률(67.7%)은 EU 각국 자국민(64.6%)의 취업률보다 높다. 반면, EU 전체 실업률은

역내 이주민이 12.5%로 각국 자국민의 9.8%보다 다소 높다. 그러나 취업률과 실업률 차이 모두 ‘역내 이주민이 공짜 복지만 노리고 이주한다.’는 이른바 복지이주(welfare tourism)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주요 관련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의 실업률 분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자국민과 역내 이주민의 실업률은 영국 7.8%, 7.4%, 프랑스 9.3%, 10.3%, 독일 4.9%, 7.1%다.

실제로 EU 주요국에서 역내 이주민이 받는 복지수혜 비중은 각국 자국민보다 현저히 낮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13개국의 자국민은 평균 91.3%의 복지혜택을 받는 반면, 역내 이주민은 평균 2.5%로 제3국에서 온 이민자들의 비중(6.2%)보다 낮다. 절대치로 비교하긴 힘들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인구 비중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일하지 않고 복지만 축낸다는 비판의 핵심 대상인 노인연금의 경우 역내 이주민의 수혜 비중이

#### ★ EU 주요국의 복지수혜 분포<sup>6</sup>

국가	자국민	(단위: %)	
		EU 역내 이주민	EU 역외 이주민
아일랜드	79.1	14.4	6.5
독일	80.6	4.2	15.2
핀란드	86.2	2.7	11.1
덴마크	93.4	2.6	4.0
키프로스	95.5	2.4	2.1
체코	98.0	2.0	0.0
네덜란드	90.4	1.8	7.8
에스토니아	70.9	0.7	28.4
포르투갈	99.4	0.6	0.0
슬로베니아	94.4	0.5	5.1
그리스	99.4	0.3	0.3
슬로바키아	99.7	0.2	0.1
루마니아	99.9	0.0	0.1
평균	91.3	2.5	6.2

자료: EU 집행위원회

<sup>6</sup> European Commission (2013, 11, 25.). Free movement of people: five actions to benefit citizens, growth and employment in the EU.를 토대로 정리. 해당 국가의 구체적인 복지항목과 대상 기간은 이 자료의 6~7쪽 참조.

일반 복지혜택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EU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EU 전체 노인연금(Old Age Solidarity Benefit) 수령자는 약 7만 명이었고 이후 2011년까지 2년간 겨우 0.9% 정도 증가하였다. 이 중 EU 역내 이주민은 2009년에 784명, 2010년에 804명, 그리고 2011년에는 1.1%인 811명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EU 역내 이주민들은 원주민들만큼 일해도 복지혜택은 훨씬 적게 받고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일방적으로 수혜를 받는 이주민보다 노동을 통해 복지기금을 늘리는 이주민 비중이 더 높다. 이미 EU의 이민법상 역내 이주민들이 노동이나 가족과 관계없이 오직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이주하는 것은 힘든 상황이다. EU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 45조)에 따르면, EU 시민은 노동이민(가족 포함)의 자유를 예외 없이 보장받는다. 그러나 노동자의 가족구성원이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거주 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경우는 신분증만 소지하면 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충분한 자원과 포괄적인 질병보험을 갖추어야만 체류가 허용되고 5년 이상 거주해야만 영주권을 인정해준다.

#### 역내 이주민은 EU의 복지 창출자

EU 이주민들이 복지 감소의 주범이 아니라 오히려 복지 증대에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각국 원주민보다 높다는 데서 잘 나타난다. 이는 이주민이 노동을 통해 창출하는 복지 예산이 그들에게 지출되는 복지 예산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 15세에서 64세 사이 EU 전체 원주민들의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71.8%이지만, 역내 이주민들의 경우 77.4%에 달한다. EU 내 제3국 이주민들의 경우 그 수치가 68.3%에 불과하다.

실제로 노동하고 있는 인구를 살펴보면 상황은 더 분명해진다. 2012년 전체 역내 이주민의 49%(660만명)가 실제로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EU 인구에서 차지하는 역내 이주민의 비중(2.7%)보다 EU 전체 노동인구 중 역내 이주민 노동인구의 비중(3.1%)이 더 높다. 반대로 15세 이상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각국 자국민의 경우 EU 27개국이나 EU 15개국이나 모두 48%인 데 반해 역내 이주민의 경우 39%로 약 10%나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역내 이주민 중 비경제 활동인구의 64%가 현거주국에서 이미 노동한 경험이 있고, 구직자의 32%가 1년 전까지 노동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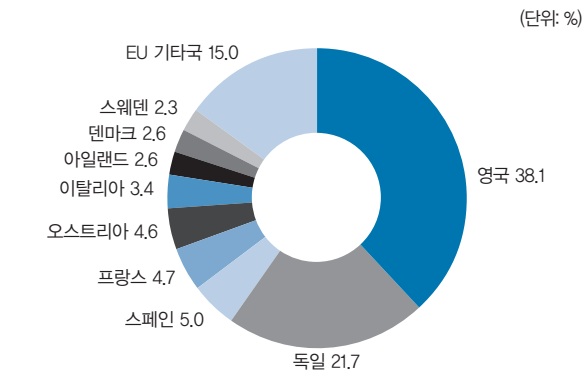
따라서 역내 이주민이 복지예산 창출에 기여하지 않고 복지수당을 받는 비중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비기여현금복지수당(Special Non-Contributory Cash Benefits)을 들 수 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그리스, 포르투갈 등 다수의 국가에서 역내 이주민들이 이 수당을 받는 비중은 1% 미만이며, 독일,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은 1~5%다. 벨기에, 아일랜드 등 극히 소수의 국가에서만 이 수당을 받는 비중이 5% 이상이다. 특히 비경제 활동 역내 이주민이 받는 현지 의료혜택의 비중은 총 의료비 지출의 0.2%, 혹은 GDP의 0.01%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 영국도 EU 역내 이민의 수혜 국가

좀 더 구체적으로 EU 역내 이민자, 특히 동유럽 이민자에 대한 공격의 날을 가장 날카롭게 세우고 있는 영국의 상황을 살펴보자. 2012년 기준 EU 국가 중에서 해외이민자의 유입이 가장 많은 국가는 영국이다. 2012년 EU 전체 이민자 유입 비중은 영국이 38.1%로 독일(21.7%), 스페인(5.0%), 프랑스(4.7%) 등 EU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

그러나 이는 영국의 해외유입인구에 대한 복지 부담이 늘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유입 인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세수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우선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고용 인력에서 역내 이주노동자, 특히 동유럽 출신 노동자의 절대량과 비중이 늘어났다. 영국 통계청이 2011년 노동력 현황을 조사한 자료<sup>7</sup>에 따르면, 이 기간에 영국 내 EU 역내 이주민

#### ★ 2012년 EU 내 해외이주민의 유입 분포



자료: 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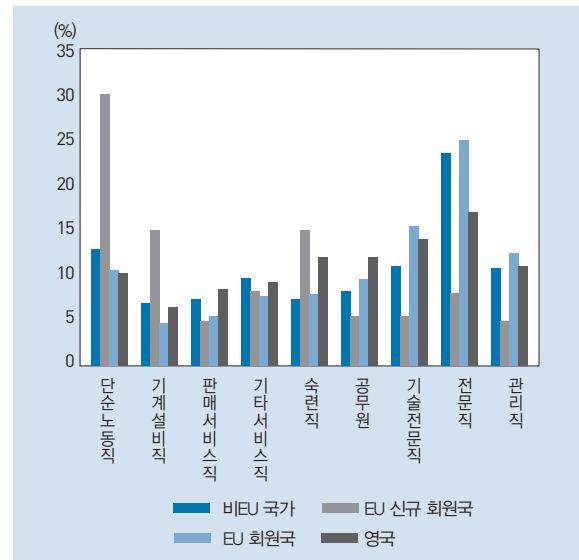
노동자의 비중은 2.7%에서 5.5%로, 동유럽, 즉 EU 신규 가입 10개국 노동자의 비중은 0.2%에서 2.8%로 증가했다. 즉, 비영국인인 EU 역내 이주노동자의 증가분의 대부분이 바로 동유럽 출신 노동자들로 채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 기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률에서도 영국인은 6.1%인 데 반해, EU 역내 이주민은 5.4%, 동유럽 이주민은 4.6%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장기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경제활동불능인구의 비율도 영국인은 11%인데 비해 역내 이주민은 7.2%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영국 내 EU 역내 이주 노동자들이 영국 전체 임금소득세의 4.3%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역내 이민자들이 영국의 복지를 갉아먹고 있다는 비판은 설자리가 없다.

또한 동유럽 이주민이 영국인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것도 근거가 박약하다. 오히려 동유럽 이주민들이 영국인들이 꺼리는 일자리를 채워 국가 전체의 고용 효율성을 올려주고 있다.<sup>8</sup> 2011년 동유럽 이주민의 26.6%는 배달, 호텔, 레스토랑 등 서비스 직종에, 15.1%는 제조업에, 10.2%는 건설업에 고용되었다. 결국 이들이 영국에서 단순노동직의 30% 이상, 기계설비직의 16%가량을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sup>8</sup> Heinz, F. F. & Ward-Warmedinger, M. (2006), Cross-border labour mobility within an enlarged EU. *European Central Bank Occasional Paper*, 52.

<sup>7</sup> Nash, H. (2013). The impact of the European Union on the UK labour market. CEBR.

#### ★ 2011년 영국의 직업 수준별 고용 분포



주: 1) EU 신규 회원국은 2001년 4월~2011년 3월 기준  
2) 기존 EU 회원국은 2001년 3월 기준으로 영국 제외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1), Labour Force Survey.

한편, 동유럽 노동자들로 인한 임금 수준 하락세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5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주민 1% 증가에 따른 임금 하락률은 겨우 0.12%에 불과하다.<sup>9</sup>

결국 영국이 이주노동자들의 폐해를 근거로 EU를 탈퇴하거나 이주민 유입을 근절하는 것은 일종의 자충수라는 비판이 거세다.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BR)의 분석<sup>10</sup>에 따르면, 영국이 향후 연간 26만 명의 이주민을 수용할 경우 2050년까지 GDP 성장률은 2% 이상, 14만 명을 수용할 경우에는 1.8% 수준을 유지하지만 EU를 탈퇴한다면 1.6%, 이주민 순유입이 제로가 될 경우에는 1%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EU 역내 이주민, 특히 동유럽 이주민에 대한 EU 주요국의 부정적 반응은 그 경제적

<sup>9</sup> Longhi, S., Nijkamp, P. & Poot, J. (2005). A meta-analytic assessment of the effect of immigration on wages. *Journal of Economic Surveys*, 19(3), pp. 451-477.

<sup>10</sup> Nash, H. (2013). The impact of the European Union on the UK labour market. CEBR.

근거가 매우 박약하다. 따라서 2013년 11월 25일 EU 집행위원회가 'EU 시민이 다른 EU 회원국에서 살고 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EU 회원국들과 기구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 서안을 발표<sup>11</sup>한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서안에서 '자유이동의 권리는 기본권이자 EU 시민권의 심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이주민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일부 회원국들의 불만을 일축하였다.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에 있다. 2009년 이후 연이어 유럽에 불어닥친 금융위기, 재정위기 등 일련의 경제 침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럽 사회가 부딪히며 극복해야 할 과제다. 그 해법은 경제위기의 본질을 사실에 근거하여 파악하려는 실물적인 노력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 유럽에서는 경제위기를 계기로 무고한 정치적 희생양을 찾아내고 경제 문제를 민족 문제로 비화하려는 극우세력이 득세하고 있다. 마치 2차 세계대전 직전의 독일을 연상시키는 작금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영국에서는 56명이 사망하고 700여 명이 부상당한 2005년 런던 테러 이후 '외국인, 특히 유색인은 인종적, 문화적으로 영국인에 비해 열등하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이 고통이다.'<sup>12</sup>라고 주장하는 분리주의 노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06년 토니 블레어 총리는 문화적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이주민들이 '영국적 가치(British Values)'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건강했던 유럽의 다문화주의가 폭력적인 분리주의 혹은 동화주의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유럽은 자신의 문화적 우월성, 자신감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소수민족에 대한 맹목적인 차별과 폭력은 결국 유럽이 당면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여 결국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지금이야말로 EU 탄생의 근본 취지와 '톨레랑스'의 원칙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한 때다. ★

이대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sup>11</sup> European Commission (2013, 11, 25.). Free movement of people: five actions to benefit citizens, growth and employment in the EU.

<sup>12</sup> 김수행 (2006). "영국의 제노포비아 현상에 대한 연구." 김세균 (편), 『유럽의 제노포비아』 (pp. 53). 문화과학사.



# 금융시장 분절화 해소를 통한 유로존 경제 회복

## Financial market fragmentation and Eurozone's recovery

Despite an accommodative monetary policy stance, bank lending conditions have remained heterogeneous in an environment of persistent sovereign debt tensions, fragile economic activity, weak capital positions and high levels of uncertainty. Consequently, very low policy interest rates have not been passed through to bank lending rates to the same extent as observed in the past in several countries where the effects of such an accommodative monetary policy stance would be particularly welcome. Furthermore, standard pass-through models are ill-equipped to explain the increasing levels of heterogeneity in bank lending rates during the crisis because they do not include risk factors and sovereign debt spreads among the explanatory variable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provides new empirical evidence on the interest rate pass-through in the four largest euro area economies based on newly developed pass-through models that account for the impact of sovereign tensions and risk factors affecting interest rate setting behaviour. This evidence is based on harmonised MFI interest rate statistics from 2003. Simulations based on these models confirm that risk factors and sovereign debt spreads have had a strong impact on bank lending rates in Italy and Spain in recent years.

2013년 8월 ECB는 유로존 금융시장의 분절화 현상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ECB는 이 보고서에서 유동성 공급과 기준금리 인하 등 지속적인 통화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금융시장의 분절화가 통화정책 파급경로를 손상시켜 실물경기 부양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유로존 금융시장의

분절화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로 인해 회원국의 금융시장 여건이 매우 상이해지면서 역내 대출금리 격차가 확대된 현상으로, 은행동맹과 같은 공동의 정책대응 노력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 보고서에서는 유로존 회원국 간 대출금리 격차를 측정해보기 위해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4개국의 비금융기관과 가계의 장단기대출금리를 지표화했다. 비금융기관의 경우 2011년 4월 ECB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자 독일, 프랑스에 비해 스페인, 이탈리아의 지표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반면, 2011년 11월 ECB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자 독일, 프랑스에서 효과가 즉각 나타났지만 스페인, 이탈리아는 미미하게 나타났다. 가계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2010년 재정위기 우려가 짙어지자 모기지 대출 비중이 높은 스페인, 이탈리아의 지표가 프랑스, 독일에 비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2011년 11월 ECB의 기준금리 인하로 유로존 전반의 모기지 금리가 하락했으나 스페인, 이탈리아는 독일, 프랑스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정리하면 독일, 프랑스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을 따라 움직였으나 스페인, 이탈리아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서 벗어났으며, 두 그룹의 분산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대출금리 변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된다. 통화정책 파급경로를 분석하는 전통적인 표준모형(standard pass-through model)에서도 신용리스크나 은행의 대출능력은 배제한 채 기준금리를 주요 변수로 이용하여 대출금리 변동을 검토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스페인, 이탈리아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외의 변수가 영향을 준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재정위기국 비금융기관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실업자가 증가하면 민간부문의 대출상환능력에 의구심을 품은 은행들은 위험회피 성향이 커지면서 신용기준(credit standards)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부도위기에 놓인 국가들의 국채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어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동시에 기타 채권금리와 예금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회원국 간 대출금리 이질화 현상이 심화된다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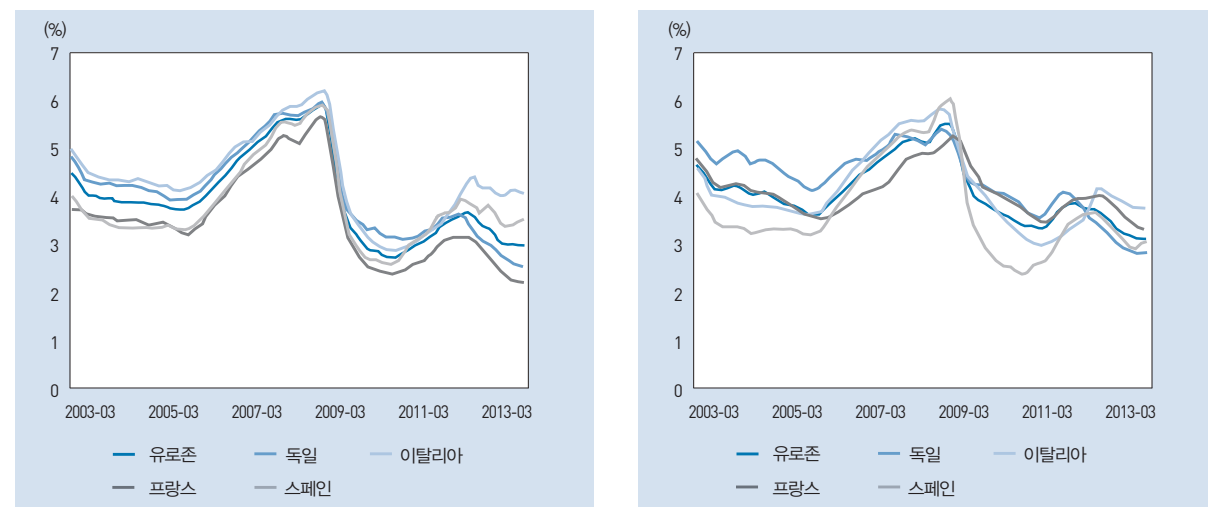
ECB는 위의 설명을 증명하기 위해 새로운 실증분석 모델을 사용하여 기준금리 외에 유로존 역내 대출금리 격차를 확대시킨 변수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기준금리 외에 국채금리 스프레드, 은행의 자금조달 위험, 민간부문의 대출상환 위험을 변수로 포함했다. 분석 결과 2011년 3월~2013년 4월 사이 기준금리의 하락이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대출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은행의 민간부문 대출상환능력에 대한 불신과 국채시장의 긴장감이 시중은행금리에 강한 상승 압력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나타나 기준금리 하락 조정이 시중은행금리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라 재정위기국을 둘러싼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역내 대출금리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졌음이 증명되었다.

ECB의 다양한 전통·비전통 대응책으로 재정위기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본격적인 실물경제의 회복은 아직 이르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ECB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실물경제로 온전히 전달되어 유로존 경제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시장 분절화가 시급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협력력을 바탕으로 한 구조개혁이 수반되어야 하며, 은행동맹의 구축을 통해 외부충격에 대한 은행의 대응력을 강화해 금융안정화를 도모하고 비금융기관과 가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European Central Bank (2013.8.), Assessing the retail bank interest rate pass-through in the Euro area at times of financial fragmentation.) ★

이서영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 애널리스트

### ★ 유로존의 비금융기관(좌)과 가계(우)의 가중평균 대출금리 추이



자료: European Central Bank (2013.8.), Assessing the retail bank interest rate pass-through in the Euro area at times of financial fragmentation.



## 제21회 EU Core-Circle Society 세미나 개최 The 21<sup>st</sup> EU Core-Circle Society Seminar

On December 12<sup>th</sup> 2013, the Yonsei-SERI EU Centre held its 21<sup>st</sup> Core Circle Society Seminar at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Dae yong Baek, a lawyer from Sejong LLP, delivered a lecture under the title of 'Consolidation of EU Data Protection Rules', highlighting important changes under the EU Data Directive amendment (2012). Mr. Back emphasised that the revised rule not only has implications on the direction of Korea's revision of its own data protection rules but also has a direct impact on Korean firms, and hence it is important to closely monitor the future developments around the EU's Data Protection Rules, he said.

2013년 12월 12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제21회 EU Core-Circle Society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EU의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강화되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법무법인 세종의 백대용 변호사가 한층 강화된 EU의 개인정보 보호규칙 개정안(2012)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백대용 변호사는 EU의 개인정보 보호규칙 개정안이 향후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방향에 시사점을 줄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내용과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